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바이라인					
일시/장소	일시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오후 5시 30분 ~ 오후 7시			장소	사회·경영2관 13311
참여 인원	학과	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학번	2020****	이름	김*아
	학과	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학번	2021****	이름	장*림
	학과	법학과	학번	2021****	이름	정*성
	학과	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학번	2021****	이름	최*수
	학과	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학번	2022****	이름	배*휘
	학과	사회학과	학번	2024****	이름	김*현
	참석인원(명)	6/6			참가자 대표	최*수 (서명)
도서	도서명	월든			저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
	출판사	민음사	출판연도	2021.11.12	번역자	정희성
오늘의 북클럽 주제		삶: 자연				
활동 내용 & 방법						
<p>1. 활동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을 읽으며 가장 감명 깊었던 묘사 또는 은유는 무엇인지 발표. - 자신이 가본 자연환경 중 기억에 남는 곳과 그 이유를 설명. - 현시대에 벌어지는 환경 오염 문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논의. 자연환경 보존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명목 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 국제 정치에서는 잘 실현되지 되지 않는 이유를 논의. - 현 사회에서 책의 저자처럼 자연주의 및 초월주의적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토론. - 추가로 한국 언론은 자연이라는 의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평가. <p>2.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면 토론 (발제식) - 질의응답 						
활동 결과						
<p>* 최*수 (참가자대표) - 토론 흐름 정리 및 보충 의견</p> <p>전반적으로 월든이라는 책의 방대한 볼륨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것에 피로를 느낀 사람이 많았다. 그럼에도 책의 저자가 자연을 묘사하고 서술하는 방식은 그 자체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는 평이 주를 이뤘고, 그렇기에 분량이 많음에도 모두 끝까지 완독할 수 있었다는 모든 토론자의 공통 의견이 있었다. 가장 감명 깊었던 묘사와 은유를 논하는 시간에서는 시각적 심상에 집중한 토론자들이 많았다. 월든에는 자연의 색깔과 움직임에 대한 묘사가 자주 나온다. 특히 자연을 사람으로 빗대어 호수를 눈동자라고 표현하는 등 우리 마음에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표현이 특징이다. 이런 부분이 토론자들의 의견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시각적 심상 이외에도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나 풀냄새 등 청각 및 후각 등을 묘사한 측면에 대한 논의도 존재했다. 이어 은유 부분에서는 자본주의와 경쟁 사회에 대한 비판을 우회해 표현한 내용에 대한 평가가 이어졌다. 고전적인 방식대로 은유를 통해 사회를 비판하는 데이비드 소로의 사상가적 모습이 대두되는 측면이었다.</p> <p>전반적으로 각 토론자가 자연을 만난 순간은 일상이 아니라 특별한 순간이었다. 자신이 가본 자연환경을 논하면서 각자의 여행경험을 가져온 토론자들이 많았다. 이는 우리 일상에서 자연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반증이</p>						

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부분 외국이나 다른 지역에 갔다가 만난 자연환경에 감탄하고 침을 즐기는 내용을 공유했다. 물론 일부 토론자는 자신의 주거지 주변에 있는 공원이나 강을 예시로 들면서 일상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자연환경에 대한 얘기도 꺼냈다. 이 부분에서 인문 환경 속에 있는 자연환경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발생했다. 공원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직접적으로 나뭇가지를 손질하는 등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가 필요했다. 자연을 우리의 소유물로만 여겨도 되는가에 대한 비판과 일상속에서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관리하는 것은 공존의 한 방법이라는 의견이 모두 존재했다. 한편, 외국에 다녀온 토론자는 오히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대로의 자연을 보면서 감탄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환경오염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모든 토론자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자연을 자본의 증진 수단으로서 소비할 때 환경 오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추구하는 삶은 미니멀리즘과 은둔주의가 결합된 방식으로 실현된다. 반면, 자본주의는 미니멀리즘 및 은둔주의와 정반대의 성격을 추구한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율을 발생시켜 이윤을 극대화해야 하고, 생산 수단과 노동자가 한 곳으로 결집할수록 지리적 경제성이 커진다. 모든 행동의 목표를 돈벌이로 고정해놓고 그에 맞춰 각 사회의 구성 요소를 배치하는 자본주의적 삶에서 자연환경의 보존은 뒷전이 된다. 더욱이 급격한 파괴로 자연은 자체적으로 지닌 회복성을 상실하고 있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 국제 정치적 합의가 몇 차례 진행됐지만, 명목상의 합의에 그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국제 정치는 보통 힘에 의해 좌우되고, 각 나라가 자기 나라의 이익만을 추구하다보니 계속 책임을 떠넘긴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경쟁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다. 단순 국제 정치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누가 더 돈을 많이 버나로 경쟁하다보니 자연 파괴는 물론이고 개개인의 삶의 목적성까지 잃어버린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눈 후 월튼은 단순히 자연 환경 보존에 대한 책이 아니라 스스로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성찰해볼 수 있는 책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월튼에서 제시한 삶의 방식을 현시대에 사는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자 토론자 대부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럼에도 월튼 속 삶의 방식이 의미가 없다는 평가는 나오지 않았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테제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그와 동시에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수정해나가는 복합적 행위의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자연을 활용하되 오염하지 않는 절충적 행위의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월튼에서 제시된 삶의 방식은 그 자체로 꽤 극단적이다. 현시대의 우리가 이를 따라하는 것은 무리겠으나 그 삶 속에서 찾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로 접하고, 거대한 자본주의적 굴레 안에서 친환경적인 행위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이 책을 읽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 김*아 - 책을 읽고 느낀 점

“젊은이들이 당장에 인생을 실험해보는 것보다 사는 법을 더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겠는가? 그렇게 하면 수학 공부만큼이나 그들의 정신을 단련시키게 될 것이다. 가령 한 소년에게 예술과 과학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싶다면 나는 그 아이를 어떤 교수가 있는 곳으로 보내는 식의 흔해빠진 방법은 쓰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강의되고 실습되지만 삶의 예술은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곳에서는 망원경이나 현미경으로 세계를 관찰하는 법은 가르치지만, 육안으로 세상을 보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는다. 화학은 공부하되 자기의 빵이 어떻게 구워지는가는 배우지 않으며, 기계학은 배우되 빵은 어떻게 버는가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는다. 해양성의 새로운 위성은 발견해내지만, 자기 눈의 티는 보지 못하며 또한 자기가 지금 어떤 악당의 위성 노릇을 하고 있는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한 방울의 식초 안에 사는 괴균들을 연구하면서 자기의 주위에서 우글거리는 괴물들에게 자신이 잡아먹히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월튼을 읽으면서 감명 깊었던 두 문단이다. 도시에서의 삶은 고착되었다. 해야 하는 일을 시키는 대로 살아

간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그런 인생의 빈틈을 위의 구절이 설명한다. 정해진 규칙대로 사는 도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망이 들기도 했다.

그런 도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자연경관이 우리 도시 안에 채워져 있다. 완전한 자연의 공간은 아니더라도 도시 속 자연만으로도 마음의 치유를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청계천'을 좋아한다. 회사 건물들 사이를 가로지르는 하천은 사람들의 쉼터로 자리 잡았다. 발을 담그기도 하고, 흘러가는 물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봐도 자연이 주는 치유를 몸소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자연에게 치유를 받는데, 도시 사람으로 남아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시대에 벌어지는 환경오염 문제의 문제는 '도시 발전'에 있다고 본다. 사람들의 편리함에서 오는 소모품들이 버려지는 과정에서 쓰레기 처리 문제가 환경을 오염시킨다. 버스정류장에서만 봐도 버려져 있는 일회용품 컵들이 자주 보인다. 먹고 마시다만 카페 음료가 버려져 있는데, 이는 도시의 규칙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이다. 버스에는 음료를 들고 탈 수 없게 법이 개정되었는데, 버스정류장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이런 작은 부분에서도 빈틈이 있는데 아마 우리가 닿지 못하는 영역에서 우리는 자연을 침범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오염 문제를 일상생활에서 생각하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가끔 눈을 감는다. 복잡한 도시의 소음이 임계점을 넘을 때, 뻑뻑한 빌딩 숲이 숨통을 조여올 때, 지끈거리는 두통을 잠재우기 위해 우리는 본능적으로 푸른 숲과 고요한 호수를 머릿속에 그린다. 눈을 감아야만 비로소 보이는 평온, 그것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밟 딛고 선 현실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를 방증한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가 170년 전 월든 호숫가로 떠나며 던졌던 질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유효하다. 과연 우리는 이 소음 속에서 '산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저 '견디고' 있는가. 나는 현대 사회에서도 소로우와 같은 자연주의적 삶이 가능하며, 그것이야말로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유일한 구원이라고 믿는다.

현대인에게 자연은 일종의 '해열제'다. 우리는 치열한 경쟁과 관계의 피로 속에서 병을 얻고, 주말이나 휴가를 통해 잠시 자연을 소비하며 통증을 잊는다. 하지만 해열제는 근본적인 치료법이 될 수 없다. 내가 자연주의적 삶을 지향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머리가 아플 때마다 눈을 감고 자연을 '상상'해야 하는 삶이 아니라, 눈을 떴을 때 마주하는 현실 자체가 자연인 삶을 살고 싶기 때문이다. 도피처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생활의 터전으로서의 자연을 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치유'를 넘어선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

소로우가 말한 초월주의(Transcendentalism)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물질과 타인의 시선에 종속된 껍데기 삶을 벗어던지고, 인간 본연의 존엄과 자유를 되찾자는 선언이다. 도시는 편리함을 주지만, 그 대가로 우리의 '생각할 시간'과 '고요한 속도'를 앗아갔다. 끊임없이 울리는 알람과 쏟아지는 정보는 나 자신과 대화할 틈을 주지 않는다. 반면, 자연은 우리에게 그 무엇도 강요하지 않는다. 그저 계절의 순환과 해가 뜨고 지는 정직한 시간만이 흐를 뿐이다. 이 거대한 침묵 속에서만 인간은 비로소 타인이 아닌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다.

현대적 의미의 '월든'은 물리적 고립이 아닌 정신적 독립을 의미한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 노동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복잡한 인맥보다는 깊이 있는 고독을 즐기며, 도시의 속도가 아닌 자연의 리듬에 맞춰 걷는 것. 이것은 문명의 거부가 아니라, 문명이 잃어버린 '삶의 본질'을 되찾는 주체적인 선택이다.

자연이 주는 평온함을 존경한다는 것은, 자연의 질서가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질서보다 우월함을 인정하는 겸허한 태도다. 상상 속에서만 행복한 사람은 불행하다. 우리는 이제 눈을 감아야만 닿을 수 있는 가상의 숲에서 걸어 나와, 흙을 밟고 바람을 느낄 수 있는 현실의 숲으로 가야 한다. 그곳에 두통 없는 삶, 상상할 필요 없이 주어지는 매일의 평온이 있기 때문이다. 소로우의 월든은 박제된 고전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떠나야 할 미래의 이정표다.

* 장*림 - 책을 읽고 느낀 점

책의 초반부에 등장하는 '인디언의 바구니' 일화가 가장 인상 깊었다. 소로는 훌륭한 솜씨로 바구니를 만들었으나 시장의 수요를 파악하지 못해 팔지 못한 인디언을 묘사한다. 이어 소로 자신도 바구니를 엮었지만 '남이 살 만한 것'으로 만들지 못했음을 고백한다.

여기서 소로의 선택은 남다르다. 그는 어떻게 하면 바구니를 잘 팔 수 있을지 연구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팔지 않아도 될 것인가'를 연구했다. 이 대목은 현대 사회가 강요하는 효용성(쓸모)과 본질적 가치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시장에서 팔리지 않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엮을 가치가 있었다'는 소로의 통찰은, 오직 성과나 결과물로만 평가받는 현대인들에게 과정 자체의 소중함과 내면의 만족이 더 중요하다는 위로와 깨달음을 준다.

나는 숲이나 산 같은 복잡한 자연 환경을 썩 즐기는 편은 아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좋아하는 자연이 있다면 바로 바다다. 《월든》에서 소로가 숲으로 들어가 삶을 가장 본질적인 요소만 남기려 했던 것처럼, 바다는 복잡했던 세상을 단 두 가지, 하늘과 물로 단순화시켜 준다. 그 거대하고 단순한 풍경 앞에서 내 고민들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느낄 수 있었다. 숲이 우리에게 다가와 많은 것을 보여준다면, 바다는 거리를 둔 채 스스로를 비워내고 돌아볼 공간을 내어주는 자연이라고 느꼈다.

현대 사회 환경 오염의 근본적인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소로가 비판했던 '필요 이상의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대량 생산 및 대량 소비 시스템, 즉 '끝없는 성장 신화'다. 둘째, 산업화 이후 지속되어 온 화석 연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다. 셋째, '나 하나쯤이야'라고 생각하는 개인의 무관심이다.

이러한 원인들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폭염이나 홍수 같은 예측 불가능한 이상 기후가 일상화되는 기후 위기가 닥쳤으며, 미세 플라스틱 확산과 생물 다양성 감소 등 되돌리기 힘든 생태계 파괴가 진행 중이다. 또한, 이러한 환경 재난의 피해가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게 더욱 집중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환경 보존을 위한 국제적 합의가 실제 정치에서 잘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선, 환경 규제가 당장의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비용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국가 간,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첨예한 경제적 이해관계 대립이 발생한다.

또한, 파리 기후 협약과 같은 대부분의 국제 합의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각국의 '자발적 약속'에 기반하고 있어 구속력이 부족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 마지막으로, 정치인들은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하므로 수십 년이 걸리는 장기적인 환경 문제보다는 당장의 경제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는 '정치적 단기성'의 한계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하는 자연환경 보존 정책은 쉽게 찾아볼 수 없다.

현대 사회에서 소로처럼 오두막을 짓고 사는 물리적인 모방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그의 철학과 정신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실천하는 것은 가능하며, 오히려 더욱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 노동의 목적을 재정립하여 돈을 벌기 위해 삶을 희생하지 않고, 삶을 영위할 만큼만 일하며 남는 시간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쓰는 것(바구니를 팔지 않을 자유)이 현대 사회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삶은 개인적으로는 현대인의 '조용한 절망'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는 길이며, 사회적으로는 소비지상주의 시스템에 동조하지 않는 가장 평화롭고 근본적인 저항이자 지속 가능한 삶의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한국 언론은 기후 위기나 플라스틱 문제 등 주요 환경 이슈의 심각성을 알려 국민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러나 몇 가지 비판적인 측면 또한 존재한다.

우선, 홍수나 산불 등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만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이후 꾸준한 추적이나 근본적인 대안 제시는 부족한 '단발성 사건 보도'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환경 보호를 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묘사하는 등 경제 논리에 종속된 프레임을 통해 독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거나, 편향된 시각을 조장하는 기조의 기사들이 존재한다는 점도 문제다.

* 정*성 - 책을 읽고 느낀 점

오늘 아침도 우리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든 커피로 하루를 열고, 편리함을 쫓아 쏟아지는 상품들을 소비한다. 그러면서도 창밖 이상기후 뉴스엔 잠깐 한숨을 쉬고 만다. 매년 여름철마다 기록적인 폭우에 도시 한복판이 물에 잠기고, 숨 막히는 폭염과 산불 소식이 세계 곳곳에서 들려온다.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이미 1.1°C나 상승했고, 그 결과 극한 기상변동이 어느 때보다 잦아졌다. 그럼에도 과연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 170여 년 전,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은 자연 속에서의 자급자족과 문명 비판을 노래한 책이다. 반세기가 넘은 고전이지만, 오늘날 기후 위기 앞에서 이 책이 던지는 메시지는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다가온다. 월든 호숫가 숲속 오두막에서 보낸 2년의 실험적 삶은 현대 문명에 어떤 경고와 대안을 들려주는지, 기후 위기의 한복판에서 다시금 귀 기울여 보게 된다.

소로는 한때 산업화로 들썩이던 미국 사회를 떠나 “간소한 삶을 살겠다”며 숲으로 들어갔다. 그는 통나무집을 손수 짓고 직접 농사를 지으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냈다. 울창한 숲과 잔잔한 호수 곁에서 그는 문명이 잊고 지낸 자연의 리듬과 마주했다. 『월든』 속에는 계절의 변화, 새벽 안개의 아름다움, 호숫물의 고요함 같은 자연의 속삭임이 가득하다. 소로에게 자연은 단순한 자원이 아닌 스승이자 벗이었다. 그는 “문명이 발전해도 인간의 본성이 천박하다면 아름다운 자연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물음을 던졌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자연과 한참 동떨어진 생활에 익숙해져 버렸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모여 살고, 우리나라 역시 도시화율이 90%를 넘어섰다. 콘크리트 숲 사이에 갇혀 지내다 보면, 자연의 소중함은 커녕 자신의 숨 쉬는 환경조차 쉽게 잊어버리기 마련이다. 울창한 나무로 가득한 숲을 밀어내고 세운 빌딩 숲, 편리함 뒤에 감춰진 탄소 배출과 환경 파괴가 누적된 결과야말로 지금의 기후 위기를 반증하는 결과다. 소로의 눈으로 본다면, 자연과의 단절이야말로 현대 문명이 자초한 위기의 근원이다.

문명사회에 대한 소로의 비판은 기후 위기의 원인과의 맞닿아 있다. 그는 사람들이 생활에 꼭 필요하지도 않은 과도한 물질을 좇느라 정작 삶의 본질을 잃고 산다고 질타했다. 오늘날 지구적 환경 위기의 배경에도 이 과잉 소비문화가 자리한다. 플라스틱으로 가득한 바다와 넘쳐나는 쓰레기 산, 온갖 난개발과 황폐화가 되어버린 숲과 땅은 모두 우리 사회의 자본주의가 낳은 그림자들이다. 실제로 “과도한 소비는 환경을 파괴하고, 소비 자체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까지 부정하는 일”이라는 지적이 있듯이, 필요 이상의 소비는 지구의 종말 시계를 더욱더 앞당기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소비를 부추기는 현대 문명의 속도전이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경제 발전의 엔진으로 삼았다. 그러나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무한한 산업화의 대가는 지구온난화로 돌아왔다. 실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보고에 따르면 2011~2020년 사이 지구 평균기온은 19세기 산업화 이전 대비 약 1.1°C 상승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 추세대로라면 머지않아 지구 온도가 1.5°C를 넘어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적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소로가 우려했던 문명의 폭주가 이제는 기후 붕괴라는 형태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 소로는 『월든』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는다. “정녕 이토록 복잡한 삶이 필요한가?” 그의 답은 명료했다. “단순하게 살라(Simplify, simplify).” 한 사람이 스스로 필요를 줄이고 소박하게 살면, 자연이 감당해야 할 무게도 그만큼 줄어든다. 먼저 개인 차원에서는 소로처럼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

해야 한다. 진정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되묻고, 불필요한 소비와 낭비를 줄이는 절제의 미덕을 회복해야 한다. 예컨대 일회용품 줄이기나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 절약 같은 작은 실천들은 우리 생활을 크게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탄소 발자국을 크게 감축할 수 있다. “자신의 여분 재산은 가난한 자와 나누라”던 소로의 가르침대로, 과잉을 버리고 나눔과 절제의 삶을 살 때 지속 가능한 미래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다음으로 자연과의 조화를 되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도시 한가운데서 소로처럼 당장 숲속 오두막 생활을 할 순 없더라도, 우리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바꿀 수는 있다. 주말에 가까운 산과 공원을 찾고, 흙을 밟고 나무와 교감하는 것만으로도 자연과의 관계 회복은 시작된다. 내 집에 작은 텃밭을 가꾸고 꽃과 나무를 심는 일도 좋다. 이런 실천은 자연을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교감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교육과 문화에서도 생태 감수성을 키우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기업들도 개발 사업 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부터 숙고하는 사회라면 기후 위기에 훨씬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인간도 자연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공존을 모색할 때, 기울어진 인류 문명을 바로 세울 힘이 생긴다. 무엇보다도 개개인의 실천을 넘어 사회 전반의 생태적 전환이 절실하다. 기후 위기의 근본 원인은 개인의 일상이라기보다 화석연료와 성장 만능을 기반으로 한 거시적 시스템에 있다. 실제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0%는 단 100여 개 기업에서 나오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거대한 경제 구조가 지속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이상 개인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다. 이제는 우리가 몸담은 공동체와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혁신과 산업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 석탄과 석유 중심의 경제를 재생에너지와 순환 경제로 바꾸는 결단이 필요하다. 다행히 세계 곳곳에서 탄소중립을 향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여러 나라가 2030년이나 2050년을 목표로 탄소 배출을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하고 있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정부의 정책 결정과 예산 투입은 여전히 미온적이고, 기후 위기를 가속하는 기업의 이윤 추구 행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소로가 ‘삶을 성찰하라’고 촉구했듯, 우리 사회도 성장을 맹신했던 지난날을 성찰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처럼 기후 위기는 개인과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후 위기의 주된 책임은 개인보다 대규모 배출과 산업정책을 주도해 온 국가와 국제 관계 속에 있다. 특히 파리협정에서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체계는 그 자체로 국제적 형평성과 기후 정의 논란을 동반하고 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의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2017년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며 국제적 책임을 회피했다. 이는 미국의 신뢰도에 큰 손상을 입혔고, 세계 2위의 배출국이 빠진 협정은 실효성에 큰 타격을 받았다. 이후 2021년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긴 했지만, 다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들어서면서 탈퇴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협정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세계 강국의 두 나라 중 어느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탈퇴를 해버리고, 정치적 변화에 따라 협정의 가입과 탈퇴가 계속 반복된다면 협정의 실효성과 강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들은 기후 위기에 가장 취약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 책임은 거의 없으며, 감축 실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나 기술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의 감축목표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다. 이를 위해 국제 사회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에 따라 국가별 감축 여력과 책임을 고려한 구조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 지원과 부담이 부족해 개도국들의 이행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역시 2025년 11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했다. 이 목표는 2018년 대비 2035년까지 53~61%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의 중장기 감축 비전을 제시한 첫 선언이다. 또한 국제 사회에서 기후 리더십을 보여주는 신호이자, 국내 정책 전환의 이정표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수치가 실질적인 전환을 수반하지 못하면 또 하나의 선언으로 남을 수 있다. 산업계의 구조 개편과 에너지 전환 투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뼈를 깎는 변화 없이는

53%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아시아 국가 중 기후 총회를 유치하려는 우리나라의 외교적 위상과 맞물려, 이 목표는 단지 수치가 아니라 국제 사회에 대한 약속이며 기후 정의의 일부라는 점에서 더욱 무게를 지닌다.

이 거대한 전환을 이루기 위해선 사회 문화적인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후 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제도와 가치관 전반에 대한 도전이다.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는 경제 성장과 자본주의의 확산을 변영의 척도로 여겨왔다. 이제는 이러한 사고방식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 때다. 행복의 기준을 물질의 축적에서 벗어나 건강한 환경과 공동체적 삶으로 재정의해야 한다. 더 많이 갖는 삶이 아니라 더 풍요롭게 존재하는 삶으로의 문화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언론과 교육, 예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지속 가능한 삶의 가치를 알리는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마치 『월든』이 문명의 흐름 속에서 한 개인의 실험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제시했듯이, 현대 사회도 새로운 생태적 감수성을 키워가야 한다. 기업의 경영 철학도 이윤 극대화만이 아니라 환경과 공존하는 경영으로 변화하고,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도 단순한 경제 성장률이 아니라 탄소 감축과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한 경제 성장률로 변화해야 한다. 그야말로 사회 전체가 급격한 대전환을 이루지 않고서는 기후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다.

변화의 출발점에는 결국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와 실천이 있다. 소로가 숲속에서 보여준 용기 있는 행동처럼,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행동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환경 운동가들은 “개인의 행동과 집단의 행동은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레기를 줄이고 에너지를 아끼는 실천과 함께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고 투표장에서 기후를 고민하는 정치인을 뽑는 일까지 모두 우리의 몫이다. 실제로 “정말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재활용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쓰레기 자체를 줄여야 하며, 환경 운동에 참여하거나 정부와 기업에 책임을 촉구하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기후 위기는 단순히 소수의 전문가나 정치인에게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사회적 운명이자 책임이다. 소로는 『월든』의 한 장을 마치며 “내가 숲에 간 것은 삶을 진정으로 살고 싶어서였다”라고 고백했다.

기후 위기로 숨 가쁜 지금의 시대에, 우리에게도 묻는다. 우리는 진정으로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답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일, 그리고 모두의 삶을 바꾸는 일, 이 두 가지를 함께 해나가는 것이다. 조용한 호숫가에서 울리던 소로의 목소리는 지금 거대한 경종이 되어 우리 사회에 울려 퍼진다. 자연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음을 더는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실천과 노력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길을 함께 걸어 나갈 때다. 『월든』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행동에 옮길 때, 비로소 우리의 다음 세대는 희망의 호숫가를 거닐 수 있을 것이다.

* 배*회 - 책을 읽고 느낀 점

책 속에 등장하는 ‘호숫가에 지은 집’이라는 소재는 단순한 거처의 개념을 넘어선 존재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 구축하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고 느낀 것이다. 못 하나를 박고 판자 하나를 댈 때마다 불필요한 사회적 관습이나 기대로부터 독립하여 진정한 자아를 세워나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는 현대인에게 “당신의 삶은 진정 당신이 원하는 재료와 방식으로 지어졌는가, 아니면 사회가 정해진 설계도에 따라 억지로 지어졌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고, 많은 현대인 중 한 명인 필자가 그 질문을 이어받은 것이다. 또 ‘호수, 자연의 눈’이라는 묘사 역시 매우 중요한 자기 성찰의 도구라고 생각되어 인상 깊었다.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자기 성찰의 도구로서 자연을 제시하는 강력한 은유라고 느꼈다. “호수는 땅의 눈이다. 거기에 비친 것을 보는 사람은 자기 본성의 깊이를 잴 수 있다”고 말하는 부분은 호수가 맑은 날 하늘을 비추고 굶은 날 흙탕물을 비추듯 우리 내면도 자연이라는 거울을 통해 비로소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현대인들은 더 빨리 달리는 기차를 만드는 데, 즉 기술 발전과 산업화에 열중하지만 정작 그 기차를 타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과 목적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이는 현대 환경 문제의 핵심 원인과 정확히 일치할 수 있는데, 우리가 더 많은 부와 편리를 위해 무분별하게 자원을 소비하고 대량 생산을 하는 모습을 빗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결과가 초래할 생태계 파괴와 기후 변화는 외면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더욱 와닿는 묘사이자 표현이었다. 결론적으로 소로우는 자연과 교감하며 얻는 정신적 충만함을 강조하며 그 순환을 느끼고 일부가 되는 경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는 생각이 들었고, 현대의 환경 오염은 바로 이 인간과 자연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소로우는 가치관과는 정반대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는 소로우는 말한 '영적인 삶'을 불가능하게 만들며 인간을 물질적 풍요 속에서 '조용한 절망(Quite deperation)'의 삶을 살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느꼈다.

국제 환경 합의는 각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라는 지극히 세속적인 토대 위에 세워져 있다고 본다. 파리 기후 협약과 같은 약속만 해도 '지구'라는 공동의 집은 지키자며 고귀한 목표를 내세우지만 실제 협상 과정에서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경제 성장을 유지하려는 각국의 이기심이 치열하게 충돌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진정한 환경 보존은 국가 간의 명목상 합의가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이 직접 소비를 줄이고 자연을 존중하는 실천적인 삶의 방식으로 전환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제 합의는 개개인의 내면적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 한, 서로의 탐욕을 정당화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위선적인 정치 행위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 현대인들은 소로우와 같은 삶을 추구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 막연하지만 한 발짝 자연 친화적, 즉 스스로에게 꼭 맞는 삶을 살아가는 데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다음과 같은 요소를 떠올려보았다. 먼저 첫 번째, 의식적 소비(Conscious Consumption). 소비를 하기 전 이것이 내 삶에 진정 필요한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과시와 유행을 위한 억지 소비를 멈추고 꼭 필요한 것만 소유하는 '미니멀리즘'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습관화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소로우가 콩 농사 비용을 1센트 단위까지 계산하며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파악한 모습을 보고 하나의 근거로 들 수 있겠다는 생각에 착수했다. 두 번째, 디지털 디톡스(Digital detox). 자신을 방해하는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은 자연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좋은 걸음일뿐더러 나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다. 현대의 가장 큰 소음을 제공하는 존재라고 표현할 수 있는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에서 하루 일정 시간만이라도 의도적으로 벗어나 좁게만 봤던 세상을 넓고 다양하게 바라보는 경험을 일삼는다면 소로우가 호숫가에서 고독을 즐기며 사색했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또 다른 근거로 제시하게 되었다.

재난이나 문제의 대상으로 자연을 다루는 한국 언론은 인간에게 자연이라는 개념은 위협적인 존재로만 부각시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성찰보다는 단기적인 대책 마련에만 여론을 집중시킨다. 혹은 자연을 '힐링'이나 '휴식'을 위한 하나의 상품으로만 소비하는 경향도 강하다. '전망 좋은 카페', '럭셔리 글램핑' 등을 소개하며 자연을 인간의 즐거움을 위한 배경이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을 말한다. 소로우가 말하는 자연과 깊은 교감을 나누며 얻을 수 있던 경이로움과 지혜는 현시점 한국 언론 보도에서 찾아보기 힘들다고 생각하기에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쟁점이 되었다. 또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라고 보도함으로써 환경 규제 및 보존 정책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은 개발과 보존이 충돌하며 발생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도 느꼈다. 언론은 일자기 감소나 경제적 손실을 먼저 부각하며 환경의 가치를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소로우가 비판했던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잇은 채 수단에만 매몰된' 태도와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언론은 자연이 가진 내재적 가치나 생태계의 장기적인 중요성보다는 당장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자연 의제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 결론 내릴 수 있다고 느꼈다.

최종적으로 한국 언론은 도구적, 소비적 존재로 자연을 바라보고 통제하기에 인간 중심적 시각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부각한다는 생각에 도달했다. 이는 대중이 소로우처럼 자연의 본질적 가치를 깨닫고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것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또 자국의 끝을 바라보는 오늘날의 언

론으로 대중들은 마치 세상의 모든 일을 알지 못하면 안 될 것만 같은 강박을 갖고 살아가며,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과 정신적 여유를 빼앗겼다. 조용한 절망을 부추기는 언론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자발적으로 이전의 삶을 성찰하고 더 넓은 세상 밖을 바라보는 습관을 갖추는 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 김*현 - 책을 읽고 느낀 점

북클럽 활동으로 월든을 읽기로 정한 뒤 책장 속에서 커켜이 먼지가 쌓인 월든을 꺼내 들었다. 부끄럽게도 이 책을 읽기 전에는 그저 자연과 관련된 책이란 사실만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책을 읽으며 자연뿐 아니라 사람과 사회, 철학에 관한 책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월든은 특히나 수려한 문장이 돋보이는 책이었는데, 몇몇 문장들을 읽을 때는 무엇인가로 머리를 맞은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하였다.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문장은 “왜 우리들은 이렇게 쫓기듯이 인생을 낭비해 가면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배가 고프기도 전에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 였는데, 잠 못 이루고 지새웠던 많은 밤들의 걱정을 한 순간에 지워줬던 고마운 문장이다. 쫓기듯이 지나쳐갔던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었다. 또한 책에 나타났던 자연에 대한 섬세한 묘사들은 어린 시절의 자신을 떠올리게 했는데, 자연과 한없이 가까웠던 시절을 떠올리며, 어쩌다 자연과 이리도 멀리 떨어지게 되었는지 고민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월든을 읽으며 자연과 인간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면서 한국 언론들에서는 환경에 관한 이야기가 별로 없는지 의문을 품게 되었다.

언론과 미디어는 환경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다. 환경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에 TV 다큐멘터리는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다. 시각적 영상과 내레이션, 음악과 음향을 통해 현장을 생생히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보도 또한 시민이 환경문제를 자신의 일상과 밀접한 문제로 인식하게 하고, 시민 행동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에서 꼭 필요한 보도이다. 하지만 한국 언론은 이러한 보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 한국 언론은 환경을 전담하는 부서나 전문 기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외 여러 저명한 언론들이 환경 기사를 양성하고 실제 보도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전문 지식이나 경험, 교육받지 못한 기자들의 환경에 대한 보도는 기사는 오류투성이일 수밖에 없다. 이는 한국에도 환경 전문 기사를 교육하고 양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기후 위기가 갈수록 심화하는 현실에 맞게 언론이 깊어져야 할 사회적 책임과 환경 문제를 공론장으로 끌어낼 의무를 상기시킨다.

자연은 인간이 처음 존재했던 순간부터 우리와 쪽 함께하였다. 이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다. 월든은 어느 순간 잊어버렸던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다시금 찾게 해주는 책이었다. 그 자연은 누군가에겐 산책길로 거닐던 호수가 있는 공원이었고, 누군가에겐 어릴 적 마음껏 뛰놀던 개울가였다. 저마다의 이유로 자연과 함께했지만, 바쁜 사회 속에서 서서히 잊어버린 듯했다. 월든의 주인공 자본주의에 저항하며 숲속에 들어가 꾸린 작은 집은 자본주의의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돈과 소유에 얽매인 삶, 하루하루 눈앞에 이익과 효율에 눈이 멀어 똑바로 걸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된 인간에 대한 소로의 통찰력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다. 사회 체제에 순응하며 거대한 자본주의 앞에 끝없는 과소비와 피로감, 불행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이 아닌, 자급자족하며 적극적으로 자유를 쟁취해 가는 삶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었다. 팀원들과의 자연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는 시간 속에서,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 언론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를 위해 환경 문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두게 되었다. 자연은 우리의 삶과 달리 천천히 변화해 간다. 그렇기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북클럽 팀명	바이라인					
일시/장소	일시	2025년 11월 5일 수요일 오후 5시 30분 ~ 오후 7시			장소	사회·경영2관 13311
참여 인원	학과	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학번	2020****	이름	김*아
	학과	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학번	2021****	이름	장*림
	학과	법학과	학번	2021****	이름	정*성
	학과	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학번	2021****	이름	최*수
	학과	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학번	2022****	이름	배*휘
	학과	사회학과	학번	2024****	이름	김*현
	참석인원(명)	6/6			참가자 대표	최*수 (자명)
도서	도서명	씻밥일지			저자	천현우
	출판사	문학동네	출판연도	2022.08.23	번역자	
오늘의 북클럽 주제	삶: 노동					
활동 내용 & 방법						
<p>1. 활동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의 저자가 처했던 노동 환경이 비단 저자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사회 전체에 만연한 문제인지 주변에서 듣고 본 사례를 들어 평가. - 현 사회에서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 환경은 어떻게 형성돼 있는가에 대해 토의. - 앞으로 법적&사회적 측면에서 노동 분야가 어떤 방식으로 개선돼야 할지에 대한 방향 제시. - 추가로 한국 언론은 노동이라는 의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평가. <p>2.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면 토론 (발제식) - 질의응답 						
활동 결과						
<p>* 최*수 (참가자대표) - 토론 흐름 정리 및 보충 의견</p> <p>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라는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노동의 세계에 이미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다. 씻밥일지를 주제로 북클럽 토론을 진행하면서 서로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많이 공유할 수 있었고, 사례를 들며 문제의식을 도출할 수 있었다. 책의 저자인 천현우가 처했던 노동 환경 자체는 다소 특이한 편에 속한다. 그러나 그런 노동 환경에서 발생하는 비극과 여타 문제는 저자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는 문제라는 공통 의견이 있었다. 노동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봉급이라는 요소에서 차별이 존재했고, 이를 직접 겪은 토론자도 있었다.</p> <p>노동자의 권리와 노동 환경을 논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책의 내용에서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나 몇 개월 뒤 강제 퇴사 당하는 등의 이야기가 존재했는데, 현실에서도 노동권이 잘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재해가 간헐적으로 발생하면서 꾸준히 사상자가 늘고 있다는 것도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대표적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정신(감정) 노동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책의 저자는 용접공이라는 고된 육체노동을 업으로 삼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콜센터 직원 등 감정 노동에 몸을 담았다가 과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등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런 논의 끝에 노동권이 단순히 일을 할 권리가 아니라 안전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노동할 권리가 돼야 한다는 의견에 입을 모을 수 있었다.</p>						

노동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법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모두 노력이 필요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토론자들의 세부 의견은 다양한 분야로 나뉘었다. 사회적 인식 개선의 측면에서는 먼저 육체 노동직과 사무직 간 보이지 않는 차별적 시선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단순히 공부를 못 해서 육체 노동을 간다고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건설업이나 용접업 등의 육체 노동직이 없다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건물과 물건 등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므로 그들의 노동 가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게 선행돼야 한다. 법적 측면에서는 과도하게 노동 시간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존재했다.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토론자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준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한 강화를 주장했다.

언론을 비롯한 미디어 역시 육체 노동에 대해 안 좋은 부분을 보여주기보다 그들의 노력을 고스란히 글이나 영상에 담아야 인식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공통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다들 책을 읽으면서 천현우의 필력에 감탄했다. 천현우는 용접공인 동시에 기자 생활을 한 적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확한 묘사와 더불어 논리적인 글 구성이 따라붙자 그들이 처한 노동 현실이 우리 눈앞에 직접 그려지는 듯했다. 현장을 직접 경험한 기자의 글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언론이 노동이라는 의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역삼각형 형식의 정보 전달 기사를 넘어 그들의 노동 환경을 직접 체험한 뒤 작성하는 르포 형식의 기사가 더 많아져야 할 것이다.

* 김*아 - 책을 읽고 느낀 점

천현우의 『씻밥일지』가 쓰인 시점은 2020년대이지만, 그가 묘사하는 지방 중소기업의 풍경은 흡사 1970-80년대의 한 페이지를 보는 듯하다. 지급받은 험 유니폼, 습기와 곰팡이가 슬어 있는 휴게 공간, 훑날리는 쇠파우와 열악한 안전장치. 작가가 담담하게 기록한 이 '씻밥'의 현장은, 우리 사회가 노동 인권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믿음 뒤편에 여전히 거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증명한다. 본 비평은 『씻밥일지』가 보여준 날 것의 노동 현장을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노동의 그림자를 조명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의 노동 환경은 지표상으로는 분명 나아지고 있다. 주52시간 근무제의 도입, 최저임금의 상승,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는 꾸준히 마련되어 왔다. 하지만 『씻밥일지』 속 청년 용접공의 현실에서 이러한 제도는 적용되지 않았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노동 환경이 개선되는 동안, 하청 업체와 중소기업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곰팡이 핀 벽을 마주하며 밥을 먹는다. 험 유니폼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위생 문제를 넘어, 그곳에서 노동자가 대체 가능한 부속품으로 취급받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는 '평균적인 노동 환경의 개선'만 생각하고, 노동계급 내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기술 노동에 대한 인식의 현대화'가 시급하다. 천현우 작가가 지적했듯,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현장직을 '공돌이'로 비하하거나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는 식의 멸시가 존재한다. 독일의 마이스터 제도처럼 기술직 노동자가 숙련공으로서 사회적 존경과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언론은 노동 문제로 다투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보도한다. 이제는 사고가 나지 않은 평시의 노동 환경, 즉 곰팡이 핀 벽과 험 유니폼의 문제를 꾸준히 의제화해야 한다. 그리고 단순히 악덕 업주 개인을 비난하는 것을 넘어, 대기업-하청 구조 속에서 왜 안전 비용이 삭감될 수밖에 없는지 구조적 모순을 파헤쳐야 한다. 노동자인 천현우씨의 『씻밥일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전문가나 정치인의 입이 아니라, 천현우 작가처럼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직접 담았기 때문이다. 노동문제의 보도에 앞서 노동자의 말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느꼈다.

『씻밥일지』는 녹슨 쇠를 다루는 청년의 이야기였지만, 정작 녹이 슬어 있는 것은 노동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

의 시선과 시스템이었다. 노동 환경이 좋아졌다는 말은, 가장 열악한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체감할 때 비로소 유효하다.

* 장*림 - 책을 읽고 느낀 점

개인의 불운인가, 사회의 모순인가 천현우 작가가 ‘씻밥일지’를 통해 고발한 열악한 노동 환경은 결코 저자 개인의 특수한 불운이나 능력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 전체에 뿌리 깊게 만연한 구조적 모순이다. 책에서 묘사된 ‘위험의 외주화’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내 주변의 아르바이트 현장이나 뉴스 속 산업재해 사례와 정확히 겹쳐진다.

주변 사례를 보면, 최저임금 미지급이나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한 ‘꺼기’ 관행이 여전하며, 배달 라이더나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들은 안전장치 없이 생존을 담보로 일하고 있다. 즉, 저자의 경험은 비수도권·비대졸 청년 노동자라는 특정 계층의 이야기를 넘어,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 아래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그림자라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 사회의 노동 환경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과 기업의 ‘이윤 추구 논리’ 사이의 위태로운 줄타기 속에 형성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등 보호 장치가 존재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효율’과 ‘납기 준수’가 법보다 상위에 위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원청은 하청에게 위험한 업무를 떠넘기고 법적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어, 노동권이 보편적 권리가 아닌 사업장 규모나 고용 형태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특권’처럼 변질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육체노동을 천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역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주장을 위축시키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의 강력한 적용과 사회적 인식의 대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관용 없는 법 적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조항은 의문이 든다. 가장 영세하고 위험한 곳을 법의 보호에서 배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위험의 외주화’를 끊어내기 위해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에게 100%의 책임을 묻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기업이 안전 비용보다 처벌 비용을 더 두려워하도록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하고, 노동감독관의 권한을 강화하여 현장 감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동을 바라보는 인식의 개혁이다. 특히 최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노동자가 대다수인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나라 경제가 망한다”라며 사업주의 논리를 대변하는 여론을 형성한 것은 조금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프랑스는 휴일을 하루 줄이는 문제만으로도 전 사회가 연대하여 시위를 벌인다. 반면 우리는 노동자의 권리 찾기를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규 교육 과정에서부터 노동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노동이 비용이 아닌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임을 인식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다시 세워야 한다.

한국 언론은 노동 의제를 다룸에 있어 심각한 편향성을 보인다. 대다수 보도는 노동 문제를 ‘인권’이나 ‘삶’의 문제가 아닌, ‘경제적 손실’이나 ‘노사 갈등’의 프레임으로만 접근한다. 파업이 발생하면 “시민 불편 초래”, “수출 차질”과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을 뿐, 그들이 왜 거리로 나섰는지에 대한 심층 취재는 찾아보기 어렵다.

언론이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제 논리’에 매몰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지우고 있다. 앞으로의 언론은 ‘씻

잡일지'가 보여준 것처럼 노동자의 구체적인 삶과 노동 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파고드는 탐사 보도에 집중해야 한다. 노동 문제를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공론화하는 것이 언론의 마땅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 정*성 - 책을 읽고 느낀 점

경남의 한 작은 공장. 10톤 무게의 거대한 철판이 추락하며 작업반장의 두 다리를 덮친다. 피투성이가 된 현장에 비명이 울려 퍼진다.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동료는 급히 병원으로 실려 가고, 남은 노동자들은 망연자실 자리에 주저앉는다. “나라 곳간만 짝 차면 뭐하노? 일터 돌아가는 꼬라지가 이 모양인데.” 피를 닦아내던 선배 노동자의 입에서 험한 욕설과 함께 한탄이 터져 나온다. 며칠 뒤 옆 공정의 작업자가 기계를 조이다 손가락이 부러지는 사고까지 이어지자, 현장은 금세 두 명이나 빠져나가 썰렁해졌다. 언제든 자신도 다칠 수 있다는 불안이 엄습했고, 청년 용접공 천현우는 이 암울한 현실을 누가 알아줄까 하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그날 이후 현장의 삶과 산업재해의 참상을 일기 쓰듯 기록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나온 책이 바로 『씻밥일지』이다. 이 책에는 “당사자의 목소리가 없는 공론은 허상일 뿐”이라는 외침과 함께, 지방 중소 제조업체 현장에서 ‘씻밥’을 먹으며 살아가는 노동자의 생생한 현실이 담겨 있다. 열악한 작업환경, 차별과 갑질, 그리고 반복되는 산재(産災)의 그림자가 그의 일상에 고스란히 그려진다.

『씻밥일지』의 한 장면처럼 오늘도 수많은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다. 매일 6~7명씩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음을 당하는 비극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현실이었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 젊은 노동자가 작업 중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이 계속되자, 우리나라도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처럼 산업재해에 기업 책임을 묻는 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졌다. 특히 2020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무려 3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참사가 바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그해 시민과 노동단체 등 136곳이 모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을 벌였고, 매일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 10만 명의 청원과 산재 유가족들의 단식 농성까지 이어졌다. 마침내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 이상 회사 경영자가 노동자 사망사고에 “나 몰라라” 책임을 피해 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현장에 안전 투자를 하지 않으면 큰 비용을 치르게 한다는 압박을 가해 산재를 예방하려는 취지였다. 기업이 이윤은 독식하면서도 산업재해로 인한 비용과 피해는 사회와 노동자에게 전가해 온 현실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은 분명했다. ‘매해 2천 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나라’에서 더 이상의 희생을 줄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 시행 3년이 지난 지금, 과연 현실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안타깝게도 산재 예방이라는 기대 효과는 크지 않았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로 산업재해 재해자 수와 재해율은 오히려 증가했고, 산재 사망자 수와 사망률은 거의 줄지 않았다.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기업에서도 사고율이 되레 높아졌고, 3년 유예 후 뒤늦게 적용된 5인 이상~49인 사업장도 큰 변화가 없었다. 특히 법 적용을 아예 받지 않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재해율과 사망률이 여전히 가장 높는데, 법 시행 전후로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안타까운 산재를 줄이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겠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가장 먼저 지적되는 것은 법 적용상의 한계다. 중대재해 사건은 수사와 기소 단계부터 지지부진하다. 법 시행 후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 1,252건 중 73%에 달하는 917건은 아직도 고용노동부나 검찰의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사건 발생 후 평균적으로 1년이 넘도록 기소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며, 기소까지 2년 반 이상 걸린 사례도 있었다. 이렇게 수사와 재판이 늦어지는 사이 유족들의 한은 깊어지고, 기업의 경각심은 무뎈진다. 썰렁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실효성 있는 처벌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도 문제다. 실제 법 시행 이후 1심 판결 53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무죄 판결 비율이 10.7%로 일

반 형사사건의 3배가 넘었고, 집행유예 비율은 85.7%로 일반 형사사건의 2.3배에 달했다. 법이 정한 형량 하한선(사망사고의 경우 1년 이상 징역)에 맞춰 유죄 판결이 선고돼도, 대부분 형 집행을 유예해 실제 교도소에 가는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중대재해처벌법상 법인은 최고 50억 원까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 선고된 법인 벌금은 평균 7천만 원 수준에 그쳤다. 법 취지대로 ‘엄중 처벌’이 이루어지지는커녕,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러 있었다.

이 같은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법원의 판결에서 드러나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된 사례는 2025년 5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의 판결이다. 군산의 한 하수관 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한 사건으로, 검찰은 원청 건설사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원청이 지반 붕괴 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굴착 장소 출입 금지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가 정한 유해 및 위험 요인 확인과 개선 절차 마련 의무 위반을 적용한 것이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원청이 이미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게다가 재판부는 원청 ‘사업주’의 범위를 극도로 좁게 해석하여, 사고 당시 작업자를 직접 지휘 및 관리한 사업주는 하청업체이므로 원청 대표나 현장소장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 책임이 없다고 봤다. 결국 원청 책임자는 무죄, 원청 회사는 고작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신 하청 현장 소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하청업체에도 벌금 500만 원이 내려졌다. 입법 취지가 “원청까지 포함한 책임 강화”에 있었음에도, 결과적으로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와 다를 바 없이 가장 낮은 곳의 하청 노동자와 관리자가 죄를 뒤집어쓴 모양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취지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를 무시한 편파적인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원청 경영 책임자가 법정 의무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은 첫 사례로서, 앞으로 유사한 논리가 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우려가 컸다. 간접고용이 일반화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에서 원청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 늘어난다면, 노동자의 생명 안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심지어 최근 법원의 무죄 판결들은 하나같이 ‘예견 가능성’, 즉 사고를 예측하여 막을 수 있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다. 경영 책임자가 안전 의무를 다했지만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라고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면해주겠다는 취지다. 앞서 무죄로 끝난 몇몇 사건에서 법원은 “기업이 안전보건 의무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를 입증하면 무죄 선고도 가능하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 예컨대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하더라도 모든 산재 사고에 일률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영자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면, 혹은 사고 발생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면,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로 빠져나갈 여지가 남는다. 이러한 현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닌 근본적 한계를 보여준다. 법이 아무리 엄격하게 만들어져도 해석과 적용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틈새를 메꾸지 못한다면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2025년 3월 부산지방법원의 한 형사재판부는 아예 중대재해처벌법 일부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과잉 금지의 원칙과 책임주의, 평등원칙,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정이었다. 이처럼 사법부에서조차 법 조항 자체의 정당성을 두고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 “법 규정은 입법 목적과 체계, 해석론을 종합하면 충분히 명확하다”면서 “애초에 기업 측이 법 적용 대상을 자의적으로 넓게 좁게 해석하려 애쓰면서 명확성 부족을 탓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반박도 나온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법 조항의 미비나 해석의 여지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이 갈수록 약화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법이 시행 이후로도 산재 사고는 끊이지 않고, 오히려 처벌을 피하려는 기업들의 법적 대응은 치밀해졌으며, 일부 판결은 입법 취지와 어긋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렇다면 노동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위 사례에서 보듯, 구조적인 문제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중대재해는 대개 하청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사업장 노동자에게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한국의 산업은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아웃소싱과 고용의 유연화가 급격히 확산했다. 그리하여 비용 절감을 위해 용역과 도급, 파견 등 간접고용 형태가 늘어난 결과, 기업은 위험도가 높은 작업일수록 외주를 주고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굳혀왔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전체 산재 사고의 절반 가까이가 이 두 업종에서 발생한다. ‘원청’과 ‘하청’으로 층층이 쪼개진 고용구조 속에서 최말단 노동자들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지만,

정작 관리와 감독에 있어서는 사각지대에 방치되기 일쑤다. 앞서 언급한 군산 하청업체 사고만 봐도, 원청은 서류상 몇 가지 안전조치를 지시하고 위험성 평가표를 작성해 둔 것으로 면피했고, 실제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것은 하청 노동자였다. 현실적으로 하청 노동자의 안전은 원청의 결정과 통제력에 달려 있는데도, 법의 안전망과 판결은 아직 그 책임 고리를 확실히 묶어두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노동계가 “건설업뿐 아니라 제조업도 불법 다단계 하청구조가 산재의 주요 원인”, “중대재해 발생의 대부분이 하청 노동자”라고 지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 역시 “현장의 위험이 원청에서 하청으로 반복 전가되고 그것이 산재로 이어지고 있다”며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결국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간의 안전과 생명을 비용으로 취급해 온 산업구조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자의 체험대로 대기업 원청이 “곡소리”를 내며 경영이 어렵다고 할 때 이미 하청업체는 “사십구재를 지낸” 뒤일 만큼, 을(乙) 중의 을인 현장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높은 위험을 감내하며 버티고 있는 것이 바로 제조업의 밑바탕이었다. 그들이 다치는 사고가 나도 제대로 뉴스 한 줄 오르지 않는 현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는 피 흘리고 있다는 현실을 방치한 채 흘러온 결과가 지금의 산재 공화국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뿌리 깊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도적, 사회적, 법적 해결책을 종합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우선 법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실효성 제고가 시급하다. 법률 자체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 되어선 안 된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문제인 수사 지연부터 해결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산하에 사건이 몰리고 이를 위한 전문 인력은 부족하다 보니 수사가 마냥 늦어지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 전문성을 갖춘 산업안전 감독관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검찰 등 수사기관의 역량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입법조사처 역시 “산업 안전 보건 감독관의 질적, 양적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지적하며, 수사 지연 및 책임자 처벌 문제가 빠르게 개선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으론 사법부의 인식 전환과 적극적인 역할도 중요하다.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인 “중대산업재해 근절”을 명심하고, 기업 편의적인 ‘적당주의’에 경고하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애매한 법 조항 해석으로 책임을 면제해 주는 일이 없도록, 일관되고 엄정한 판결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심지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직도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기준을 참고하는 ‘양형 기준’이 없다. 지난 8월에 이르러서야 법무부가 대법원에 양형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중대재해 처벌 사건의 판결 기준이 판사마다 제각각인 이유다. 또한 법 적용에 있어 드러난 입법 미비점도 보완이 요구된다. 예컨대 경영 책임자의 범위와 책임 요건, 처벌 대상 행위의 명확성 등을 둘러싼 논란은 입법 단계에서 정교하게 다듬어야 했을 부분이다. 입법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저 감성적으로 여론에 휘둘리다 보니 무리하게 입법을 초래한 결과로 보인다. 애초에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쳤더라면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위헌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무관하게 국회가 앞장서서 입법을 개선하고 구체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 방향은 결코 처벌을 약화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설령 민주당이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방향으로 삼았다더라면 처음부터 형사 처벌이 아니라 과징금 부과와 같은 행정 조치를 선택해야 했다. 결국 민주당의 성급한 입법으로 기업에 면죄부를 주게 함으로써 오히려 산재 사망 사고를 더 부추기게 된 셈이다. 따라서 비용 절감 명분으로 파견과 하청 등 간접고용을 일반화해 온 기업문화를 바꾸고,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손봐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 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말 그대로 사후 처벌에 초점이 맞춰진 수단이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선제 조치가 강화되지 않으면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 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도 “산재를 예방하려면 처벌 이외에 노사 공동 책임하에 자율적 안전 보건 예방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제는 기업 스스로 달라져야 한다. 과거처럼 서류상 안전관리자로 이름만 올려두고 실질적 조치는 뒷전인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현장의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위험성 평가를 주도하고, 그 결과 드러난 위험 요인에 대해 사용주가 즉각 개선 대책을 내놓는 자율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위험성 평가란 것도 제대로 실행돼야 의미가 있다. 보여주기식 형식적 평가가 아니라, 현장의 경험과 데이터를 토대로 꼭 필요한 개선책이 도출되는 살아있는 절차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이러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감독하는 데 힘써야 한다. 특히 영세 사업장의 경우 안전 설비에 대한 투자나 전문 인력의 고용에 어려움이 큰 만큼, 정부나 지자체에서 예산과 컨설팅을 제공해 전반적 안전 수준의 저변을 끌어올리는 정책이 필요하다. 노동자들에게도 충분한 안전 교

육과 훈련 기회를 보장하여 위험 작업에 대한 거부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동시에 산업 전반에 안전 우선 문화를 뿌리내리게 하기 위한 캠페인과 홍보, 노사정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 경영진에게는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현장의 관리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전에 대한 리더십을 갖추도록 독려해야 한다.

물론 강력한 책임 추궁이 없으면 이러한 변화가 자리 잡기 어렵다.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채찍과 당근이 모두 필요하다. 노동계는 “강력한 처벌이 산재 예방의 전제조건”이라며, 처벌이 전제되지 않은 예방 대책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산재 사망자가 줄지 않자, 뒤늦게 집권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산재가 안 줄면 관련 책임자들은 직을 걸라”는 강경한 발언까지 내놓았다. 반복되는 산재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영업 정지, 공공 입찰 제한, 신규 대출 제한 등 초강력 제재를 검토하라는 지시도 있었다. 이미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신설과 벌칙 강화 등 제도 개선이 추진 중이다. 이에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보이며 “중대재해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경영계는 제재 강화만으로는 산재를 줄이기 어렵다며 우려를 표한다. 그들은 처벌 일변도가 자칫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현장의 왜곡된 보고 문화만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신 예방 역량을 높일 지원책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안전 설비에 대한 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거나,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위험 요인 개선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처벌만 강화를 해왔으면 진작 산재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라며 근본적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내놓는 접근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낸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노동자들의 안전 의식 결여도 원인의 하나라 지목하면서 작업 현장에서의 부주의를 막기 위해 CCTV나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한 기술적 감독 강화까지 언급한다. 이러한 경영계의 주장 역시 경청할 부분이 있다. 안전 사회로 가는 길은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책임지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어야지, 한쪽에만 일방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산업재해의 최종적인 책임은 기업에 있다는 점이다.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 작업자 개인의 일탈이나 부주의를 탓하며 구조적 책임을 희석해서는 안 된다. 기업은 애초에 노동자가 실수해도 다치지 않도록 시스템을 설계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경영자의 책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당연한 책무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형벌로 묻겠다는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다. 법이 무겁다고 아우성치기 전에, 왜 이런 법까지 만들어져야 했는지를 기업들은 성찰해야 한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마저 시장의 비용 논리에 맡겨두었다가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젊은 목숨을 잃지 않았는가?

씻밥을 먹으며 땀 흘려 일하던 평범한 노동자가 푸르게 멎든 다리를 이끌고 병원으로 실려 갈 때, 그 고통과 눈물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사장의 책임, 원청의 책임, 사회의 책임은 어디까지였고 지금은 어디까지 저지고 있는가. 이국종 아주대병원 외상외과 교수(현 국군대전병원장)는 “외상센터로 실려 오는 중증 환자 대부분은 블루칼라 노동 계층”이며, 자신이 수술했던 1,300여 명의 환자 중 외제차를 몰던 부자는 단 한 명만 보았을 뿐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공장에서 기계에 깔리고 건설 현장에서 추락하는 이들은 대개 사회의 아래를 떠받치는 산업현장의 노동자들이며, 국회의원이나 고위 임원이 중장비에 깔려 응급실로 실려 오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저자가 『씻밥일지』에서 폭로한 현장의 목소리도 결국 같은 호소를 하고 있다. 위험을 외주화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은 다치고 죽어 나가지만, 기득권층은 그 현실에 무감각하다. 더 이상 이 비극적 구조적 불평등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씻밥일지』에 담긴 처절한 기록은 묻고 있다. 죽음의 컨베이어벨트를 멈추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했으며, 또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 “당사자의 목소리가 없는 공론은 허상”이라면서 이제는 산업현장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현실에서 실현해야 할 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런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다.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려 일하다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할 숙제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씻밥을 먹는 이들이 내일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변화와 실천을 강하게 요구한다.

책을 읽고 나서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린 저자의 현실과 더 이상 읽을 것도 없어서 절망감조차 들지 않는 감정의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저자와 같은 젊은 청년을 이렇게까지 벼랑 끝으로 몰아붙인 존재는 과연 무엇, 혹은 누구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자연스레 오늘날 대기업과 하청업체가 극명하게 분리된 사회 구조가 저자를 위협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만들었다고 떠올릴 수 있었다. 명예와 명성이 눈이 멀어 실제로 자재들을 나르고, 뜨겁게 튀어 오르는 불꽃을 맞고, 철근 하나하나를 붙이는 사람들의 노고를 알아주려 하지 않는 사회 구조가 이어지기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 것이다. 또 이런 문제를 개인이 자처한 선택이라거나 부족했던 노력의 문제라고 치부하는 게 아니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떻게든 살아가려는 저자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려 하지 않는 대상이 사회구조이기 때문에 저자와 같은 처절한 상황을 겪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라 이유는 사회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 같다.

한국이 OECD 국가 중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이 여전히 최상위권이라는 기사를 접했다. 사회가 이 꼬리표를 떼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선량한 노동자들을 그저 걸어 다니는 기계 그 이상과 이하도 아닌 존재로 취급하는 사회적 시선과 대우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설상가상으로 명목상 물경하게 존재하는 노동 관련 법규가 적용되는 환경이 이미 조성된 지 한참이고, 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환경과 상황에 의한 것이기에 기업이 나서서 보살펴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버리는 경향 또한 절망적인 노동 현실을 만드는 데 가담했다고 생각한다. 엄청난 논란이 되었던 ‘런던베이글뮤지엄’ 직원 사망 사건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대중들은 그저 국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장사가 잘되는 베이커리라는 화려한 악세사리만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빵을 만드는 사람의 노고와 고통, 고뇌, 한숨은 결국 하늘에 먼저 닿게 되었다. 이는 노동자가 직접 피력하기 전까지 아무도 먼저 노동 환경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나마의 목소리조차 당연한 현상이라며 등한시한 회사의 무책임한 모습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 법과 정책이 만들어지면 끝인가? 그 법과 정책이 적용되는 직접적인 대상, 즉 노동자가 피부로 느껴야 할 실질적인 정책은 아직까지 한국에 완벽히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다.

투명성을 강조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전 국민에게 근무 환경이나 분위기를 까발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노동자를 이해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목소리가 더욱 명확하고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업이 나서서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과 형태, 고충을 투명하게 드러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 중심적, 그저 클릭 수에 눈이 먼 보도가 그를 끈질기게 방해한다고도 느껴진다. 위에서 언급한 런던베이글뮤지엄 직원 사망 사건과 같이 사회·경제적 입지가 큰 스케일의 사건이 터져야만 모든 언론이 쫓듯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고 느낀 것이다. 끝까지 사건의 경위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로 포장하지 말고 보다 광범위한 노동 형태를 파악하는 게 언론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 신문의 사소하다면 사소한 노력에 관심을 가지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에 돌파구를 만들어주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 생각이 들기도 했다.

* 김*현 - 책을 읽고 느낀 점

어릴 적 들었던 ‘공부 못하면 저렇게 된다’라는 말은 시대를 막론하고 이어져 왔다. 옛날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쓰였던 말이 이제는 배민 라이더들에게 통용되는 시대. 과학과 기술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냈지만, 아직 사회는 미성숙하다. 뉴스와 신문은 오늘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고 현장에 대해 보도한다.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끼여 죽고, 과로로 쓰러져 죽고, 건물이 붕괴해 깔려 죽는 소식들이 연이어 들려오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밝고 서 있는가. 오늘도 쓰러져 가는 이들에 스스로가 아님에 안심하는 현실을 여전히 변함이 없다. 바람 앞 등불처럼 사람 목숨이 가벼이 여겨지는 현장에서, 인간은 부품 그 이상, 그 이하로도 취급받지 못한다. 학력,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조원과 비노조원, 만연한 차별과 무시 속에서 ‘사람 구실’을 하기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하는 이들이 있다. 이 책을 통해 그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입시가 끝난 고등학교 3학년의 막바지. 성인이 된다는 기쁨과 설렘의 만감이 교차하던 시기에 남는 시간도 때울 겸 학교 선배들과 가구 공장에 2일 동안 출근했던 적이 있었다. 공장에서 했던 업무는 단순 반복으로 모양대로 잘린 나무에 코딩을 씌우거나, 드라이버를 이용해 조립하는 것이 전부였다. 선배, 사장, 직원, 나까지 총 4명이 일하던 곳은 늦가을에도 땀이 날 정도로 더웠다. 공장에 도착해 일을 시작하자 안전교육이나 근로계약서 없이 조심하라는 방부만을 듣고 시작했다. 맡은 일은 단순했던지라 별 탈이 없었지만, 몸보다 큰 나무 자재를 옮기는 것은 고역이었다. 일하는 내내 날리는 톱밥과 담배 냄새는 몸에 배어 숨 쉴 때마다 느껴지는 것만 같았다. 퇴근하고 집에 와 녹초가 된 몸을 누고 받은 일당 10만 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노동의 가치를 여실히 느낄 수 있는 경험이었다. 다음날 출근한 뒤 그만두기로 했다. 두 번째 일은 고장에서 매년 열리는 겨울축제에 출근했던 일이다. 1월 한 달 동안 열리는 축제에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맨손 잡기는 평균 기온 영하 7에 육박하는 한파 속에 반팔, 반바지만을 걸친 채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프로그램이다. 방수복을 입고 드나들며 물고기를 옮기고 잡아주던 경험은 고된 하루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란 말처럼 몇 주 지나며 익숙해지던 찰나에 사건이 벌어진다. 워낙 작은 동네인지라 이 동네 또래들은 거의 다 알고 있었다. 어릴 적부터 보던 얼굴들이기에,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가 많았다. 그날도 어김없이 출근하려 축제장으로 향하던 순간. 비보가 날아왔다. 동갑내기가 배달일을 하던 중 전날 사고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다. 혼란스러움도 잦아들자, 며칠 전 집을 나오며 마주친 적 있는 얼굴임을 알 수 있었다. 모를 수 없는 이름이었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 취업을 준비하며 배달 일을 하던 친구는 그렇게 곁을 떠났다. 뉴스와 신문에서만 나오던 노동자의 사망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씻밥일지는 노동자가 현장에서 어떠한 위험과 마주하는지를 현실적으로 묘사한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바람 앞 등불처럼 산업재해의 늪에 빠져있는가. 그날의 일로 비로소 깨닫게 된 진실은 재해 앞에 놓여있는 노동자는 그 누구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와는 관계없다고 여겨왔던 일들이, 언제든지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산업재해로 다치고 죽어가는 이들의 나의 친구와 동료, 사회의 구성원이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노동 문제를 마주한 계기가 되었다. 사람이 생활하기 위해선 노동은 필수 불가결인 요소다. 한국처럼 비정상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국가는 더욱 그렇다.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노동자들을 희생양 삼았던 과거의 잔재는 지금까지도 여실히 남아있다.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전환과 재계약의 불안에 시달리며,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입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 최저 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청년 공들이 기계에 끼어 희생되는 현실은 끝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학력과 돈, 권력을 앞세워 사회 계층을 구분 짓고 경험해 보지도 않은 현장에 대해 펼치는 탁상공론은 이러한 문제를 가중시킨다. 이 모든 것이 회의감으로 다가올 때 씻밥일지를 만나게 되었다. 이 책을 통해 그들의 삶 속에서도 노동이 하나의 예술로 소화될 수 있으며, 살아가기 위해 묵묵히 견디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독서 책을 읽은 후 팀원들과 진행한 토론에서는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 구조적 문제와 노동자들을 향한 사람들의 냉소, 또한 비정규직과 일용직에 대한 문제와 다양해지고 있는 산업 재해의 유형(예: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주제로 의견을 나누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런던 베이글 사건, SPC 살림 사건, 쿠팡 새벽 배송사건, 등이 발생하게 된 계기에는 법적인 보호망 부족한 것 말고도 돈의 논리로 현장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에 투자되는 비용과 시간을 사회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를 키워드로 노동환경의 해결을 위해 언론이 산업재해와 노동자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장 앞으로 내세우며, 미디어를 통한 인식 개선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또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노동자의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이 현장에서 기업이 돈의 논리를 앞세워 무력화하지 못 않도록 감시해야 하며, 사회 전반적으로 깔린 노동의 가치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노동자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 사회의 인식이 비용을 소비하는 것이 아닌 경쟁력을 위한 투자로 인식되어야 한다.



북클럽 팀명	바이라인					
일시/장소	일시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 오후 5시 30분 ~ 오후 7시			장소	사회·경영2관 13311
참여 인원	학과	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학번	2020****	이름	김*아
	학과	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학번	2021****	이름	장*림
	학과	법학과	학번	2021****	이름	정*성
	학과	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학번	2021****	이름	최*수
	학과	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학번	2022****	이름	배*휘
	학과	사회학과	학번	2024****	이름	김*현
	참석인원(명)	6/6		참가자 대표	최*수 (서명)	
도서	도서명	자몽살구클럽			저자	한로로
	출판사	어센틱	출판연도	2025.07.25	번역자	
오늘의 북클럽 주제	삶: 생명					
활동 내용 & 방법						
<p>1. 활동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로로의 <자몽살구클럽> 앨범 수록곡 중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곡을 선정하고 소감 발표. 책의 등장인물 중 가장 공감이 갔던 인물을 고르고 그 이유를 설명. - 자살이라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 원래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책을 읽은 후 그 인식이 바뀌었는지에 대해 발표. - 자살률 증가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토의. - 추가로 한국 언론은 자살이라는 의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평가. <p>2.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면 토론 (발제식) - 질의응답 						
활동 결과						
<p>* 최*수 (참가자대표) - 토론 흐름 정리 및 보충 의견</p> <p>책의 등장인물이 각자 가지고 있던 책임감의 무게와 종류가 달랐다. 그런 이유인지 책의 등장인물 중 가장 공감이 갔던 인물을 고르는 순간에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각자의 가족관계와 꿈, 속에 쌓아둔 고민 등 여러 요소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 책 자몽살구클럽은 동명의 음악앨범과 내용을 같이 한다. '시간을 달리다'라는 곡을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곡으로 뽑은 토론자가 많았고, 이외에도 '0+0' 등의 곡을 해석하는 측면에서 아무것도 아닌 숫자 0(영)이 합쳐지면 00(영영), 즉 영원을 뜻하게 되므로 아무 것도 아닌 우리가 서로 모였을 때 무한한 삶의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를 함축한 것으로 파악하는 의견이 존재했다. 모두가 고감했던 것은 책을 읽기 전에 자몽살구클럽 앨범을 듣는 것과 책을 읽은 후 듣는 감상에 차이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확실히 책을 읽은 후 음악을 들으니 개별곡의 화자가 책의 등장인물 중 누구인지를 유추하는 것도 가능했다. 곡에 서사가 입혀지니 더욱 가사와 음악이 입체적으로 다가왔다.</p> <p>자살이라는 의제는 대학생들 사이에서 매우 가볍게 다뤄지거나 혹은 아예 다뤄지지 않는 양극단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다. 매우 가볍게 다뤄진다는 것은 농담으로 다뤄진다는 뜻이다. 가령 일상에서 어떤 작은 실수를 했을 때도 "그냥 자살해야겠다"라고 농담을 던지는 등이 예시다. 이렇게 농담으로 다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아예 입밖으로 꺼내지 않는다. 자살이라는 의제가 가진 무거움과 침울한 성격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이번 토론에서 토론자들이 공통으로 보인 의견은 자살이라는 의제를 심층적으로 다룸으로써 더욱 성숙한 태</p>						

도를 지닐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자살률 증가의 원인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앞선 월든과 쇠밭일지를 주제로 하는 북클럽에서 계속 언급됐던 자본주의적 경쟁이 가장 큰 이유로 거론됐다. 자몽살구클럽의 본문 중에서 “생존에도 자격증이 필요한 세상”이라는 문구가 나온다. 이제 세상은 우리를 그냥 살아가게 두지 않고 계속 경쟁에서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입장으로 만들었다. 이런 측면에서 월든의 헨리 데이비드가 보여준 자본주의적 세계관에서 탈피한 새로운 삶의 양식과, 쇠밭일지의 천현우가 보여준 육체노동자로서 삶을 개척하는 태도가 더욱 의미 있게 다가왔다. 자본주의 속에서 획일화된 삶의 양식이 인간들에게 폭력으로 다가오고 그들을 죽음으로 내몬다면, 이를 비판하고 개선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 월든은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비판을, 쇠밭일지는 자본주의 속에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모두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사회가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논의할 수 있었다. 마지막 순서로 자몽살구클럽을 읽은 이유는 노동과 자연이라는 의제의 끝에서 결국 마주하게 되는 문제가 삶을 이루는 근본적 가치인 생명이기 때문이다. 노동과 자연은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자살이라는 비극적 결말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의 가치가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자연환경과 우리 인간이 공생하는 사회가 돼야 할 것이다.

* 김*아 - 책을 읽고 느낀 점

한로로와 자몽살구클럽은 이번 북클럽을 통해 알게 되었다. 자몽살구클럽의 주제는 청소년의 자살 문제이다. 과연 이 주제가 어른들에게 닿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 특히 같은 학생인 입장에서도 자몽살구클럽을 들어본 적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스타그램에서 한로로의 자몽살구클럽 콘서트에 다녀온 친구의 사진을 보는 순간 알았다. 분명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모르지만 그들은 아는 이야기.” 자몽살구클럽의 한 줄평이다.

자몽살구 클럽은 음악앨범으로도 발매되었다. 각 곡마다 특징이 뚜렷해서 곡마다 책 속의 주인공들이 떠올랐다. <갈림길>은 태수 시점의 곡으로, 죽음의 갈림길에서 고통을 견디면 멋진 어른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결국 자살을 선택하는 스토리를 담았다고 느꼈다. 그래서 곡이 태수의 성격처럼 밝은데 서글픈 감정이 느껴졌다. <도망>은 소하의 곡이라고 느꼈다. 집이 안식처가 되어주지 못해서 도망칠 곳이 없었던 소하는 늘 어디로 가면 좋을지 불안해했고 그런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느꼈다. <_에게>는 확실히 유민이의 곡이라 느꼈다. 책을 보면서 들으라고 만든 곡이구나 느껴졌다. 책을 보면 자살을 택한 태수에게 유민이가 노래를 바치는 장면이 자세하게 묘사되는데, 소하가 트라이앵글을 치고, 보현이가 캐스터네츠를 치는 노래가 이 노래구나 딱 느껴졌다. 책을 읽으면서 이때 되게 슬펐는데, 노래를 함께 들으면 더 풍부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런 면에서 가수인 한로로씨가 책을 쓰고 어울리는 노래를 창작했다는 점이 대단하다고 느꼈다. 책에서 또 새로운 장르의 탄생이라고 생각했고, 동화책은 내용과 어울리는 의성어가 나오는 책들이 있는데, 그게 떠오르면서 더 상위호환 된 어른동화라고 느꼈다. 그래서 <_에게>라는 곡이 책과 가장 관련 깊고 제일 필요한 노래라고 생각해서 많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그렇지만 <내일에서 온 티켓>이 힘들고 지친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어줄 것 같아서, 이곡이 마음에는 가장 와닿았다.

책을 읽으면서 태수가 공감어 갔는데 이유는 학생의 자살 원인으로 꼽히는 게 대표적으로 입시 스트레스가 많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대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서 취업에 대한 압박이 너무 힘이 드는데, 그런 입시에 대한 혹은 미래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또 주변인 즉, 엄마의 물리적인 압박까지 더해지는 태수에게 감정어입이 되면서 같은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살이라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 원래는 주변 사람에게 민폐주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자몽살구클럽을 보고 난 뒤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극한까지 몰린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처음에는 남겨진 사람들에게 대한 걱정이 먼저 들었다면, 이제는 그들이 결국 무시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자몽살구클럽>에서도 예은이가 “자살할래”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한다. 그리고 <자몽살구클럽> 멤버들은 살고 싶기 때문에 꼭 “살고 싶다”는 말을 3번 외치는 규칙이 있다. 말을 내뱉는 것에 대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살이라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데, 요즘 청소년들뿐만 아니라도 자살하고 싶다는 말을 쉽게 하는 게 자살의 원인이 되는 것 같다. 해결방안으로는 “창문으로 하교한다. 자살각이다. 자살마렵다. 자살 말린다. 한강물 온도체크 좀 해줘라.” 등등의 발언을 삼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우울감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힘들일이 생겨도 주변에 얘기할 곳이 없어 외로움이 커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련 기관이 더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다.

이번 토론을 통해 한국 언론은 자살이라는 의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토론 전에는 후속보도인 경우가 많으며,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크게 주목하고 있지 않고 특히 피해자가 분명하고 유가족분들에 대한 2차 피해를 조심스러워하기 때문에 보도 자체도 꺼려하는 편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사실보도만 할 뿐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토론을 하면서 ‘파파게노’ 효과라는 것을 알았다. 파파게노 효과란 자살보도 노출이 적을수록 자살률도 낮아진다는 이론이다. 우리 보도가 잘하고 있는 것을 나쁘게 생각할 뻔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토론을 하면서 언론에 대한 평가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배울 수 있었다.

* 장*림 - 책을 읽고 느낀 점

수록곡 중 <0+0>이 가장 마음에 깊게 남았다. 수학적으로 0 더하기 0은 여전히 0이다. 아무리 더해도 결과값은 변하지 않는 무의미한 수식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곡은 불안정한 존재인 '나(0)'와 또 다른 상처를 가진 '너(0)'가 만나, 비록 당장 온전한 '1'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함께 있는 0'이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책 속 아이들이 서로 모인다고 해서 당장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의 곁에 머물며 고독을 나누는 그들의 연대 방식이 이 노래의 제목과 가사에 완벽하게 함축되어 있다고 느꼈다.

주인공인 '소하'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동시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소하는 당초 자살을 계획하며 클럽에 들어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친구들과 교류하며 내면 깊은 곳에서 '살고 싶다'는 본능적인 열망을 발견하게 된다.

소하에게 몰입했던 지점은 바로 그 '살고 싶다는 마음'이 역설적으로 '존속살해'라는 비극적 선택을 촉발했다는 점이다. 자신이 살기 위해 고통의 근원인 아버지를 제거할 수밖에 없었던 소하의 선택은, 생존 본능이 빚어낸 가장 슬픈 비극이라고 생각한다. 아버지를 죽인 소하가 비인간적으로 느껴지면서도, 그럼 소하가 죽었어야 됐나?는 질문이 마음 깊이 남아 내면이 혼란스럽기도 했다.

책의 결말을 두고 열린 결말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나는 이를 '딱 닫힌 결말'로 해석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에서 살인 사건의 가해자가 되어버린 소하의 앞날이, 법적인 처벌과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순탄치 않을 것이 너무나 명확해 보였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자살을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 끝에 내리는 회피성 선택' 혹은 '심리적 낙담의 결과'라고 막연하게 인식했다. "왜 조금 더 견디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앞섰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책을 읽은 후 소설 속 인물들의 상황을 우리 현실에 대입해 보았을 때, "지금 우리 사회는 자살을 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살을 안 하기가 더 어려운 사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숨 막히는 경쟁과 고립 속에서 멘정신으로 삶을 지탱하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까운 일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지금 나에게 자살은 개인의 포기가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가 개인을 벼랑 끝으로 내몬 '구조적 타살'로 정의했다.

자살률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 구조'에 있다고 생각한다. 입시, 취업, 직장 생활 등 인생의 모든 과정이 단판 승부처럼 여겨지고, 한 번 미끄러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패자부활전'이 주어지지 않는 현실이 청년들을 극도의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심리 상담을 권하는 미시적 접근을 넘어, 사회적 차원의 변화가 필요하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사회적 합의와 더불어, 책 속의 '자몽살구클럽'처럼 고립된 개인들이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지지할 수 있는 '느슨하지만 단단한 연대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생존 자체가 과업이 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학보사 활동을 하며 언론의 역할을 고민하는 입장에서 볼 때, 현재 한국 언론의 자살 보도 행태는 아쉬움이 크다. 여전히 많은 기사가 자살 방법이나 장소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모방 자살(베르테르 효과)을 유발할 위험을 안고 있으며, 고인의 죽음을 단순히 클릭수를 위한 자극적인 소재로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언론은 죽음의 과정을 전시하기보다는, 그 죽음이 발생하게 된 사회 구조적 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또한, 기사 말미에 형식적으로 상담 전화번호를 붙이는 것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자살 예방 효과(파파게노 효과)를 이끌어내는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정*성 - 책을 읽고 느낀 점

우리나라는 수십 년 동안 자살률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단순한 통계적 사실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구조적 억압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개인의 절망을 사회가 끝내 붙잡아주지 못한 비극의 결과물이다. 급속도로 이어진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세계를 하나로 이은 정보화라는 시대적 변화를 그 누구보다 빠르게 경험한 우리는 그 속도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을 쉽 없이 뒤로 밀어냈고, 결국 사회의 가장자리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이들이 빠르게 늘어나게 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자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으로 여겨질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 치명적인 위기가자 사회 전체의 실패로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의 자살률이 각각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는 현실은 이 문제가 단순히 정신 질환이나 일시적인 우울의 문제로 축소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자살은 사회적 병리 중에 가장 마지막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교육, 복지 등 사회 전반을 심도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실을 문학적으로 섬세하게 다룬 작품이 바로 한로로의 『자몽살구클럽』이다. 이 소설은 여중생 네 명이 각각의 상처와 절망을 안고 자살을 고민하다가 서로를 목격하고, 서로의 고통을 비로소 인정하며, 그 과정에서 피어난 연대를 통해 다시 살아갈 이유를 발견해 나가는 이야기이다. 겉으로는 작은 비밀 모임에 불과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돌봄의 구조가 어떻게 문학적 상상력 속에서 복원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다. 『자몽살구클럽』은 자살의 원인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이해하는 접근을 넘어서 사회적 고립과 가족 구조의 붕괴, 교육 경쟁의 압박과 이를 도와줄 정신 건강 서비스의 부재, 그리고 어른들의 무관심이라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으로 확장하게 한다. 게다가 단순히 청소년의 감정 서사를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살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는 하나의 사회적 진단서로 작동한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수십 년간 OECD 1위 혹은 2위를 유지했다. 최근 수년간 자살률이 일부 감소했다거나 소폭 하락했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연령별로 분석하면 결과는 달라진다. 청소년과 청년층에서의 자살률은 줄지 않았으며, 오히려 악화된 측면도 존재한다. 특히 10대 후반과 20대 초반 여성 자살률 증가, 80세 이상 고령층의 높은 자살률은 구조적으로 매우 심각한 신호다.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 이유를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 질환의 증가로 생각하는 것은 문제의 복잡성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이다. 자살률은 사회가 개인에게 가하는 압박을 반영하는 하나의 비극적인 지표이다. 특히 청소년 자살이 늘어난다는 사실은 입시 위주의 교육

체계를, 청년 자살이 높다는 사실은 노동시장 불안정성과 경제적 절망을, 노인 자살이 많다는 사실은 빈곤과 고립이라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내포한다.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질병이나 사고가 아닌 ‘자살’이라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어린 나이에 도달한 절망은 개인의 심리적 취약함 때문이 아니라, 사회가 제공하는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고,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을 지지하는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다. 단지 통계적으로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에게 높은 수준의 학업 성취를 요구하고, 실패를 용납하지 않으며, 감정 표현을 제한하고, 실질적으로 심리적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러한 환경은 아이들에게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안정감마저 박탈한다. 청년층의 자살은 또 다른 양상을 띤다. 청년 실업률과 비정규직 증가, 직장 내에서 경쟁을 비롯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은 2030 세대에게 엄청난 무력감을 안긴다. 자살을 선택하는 청년 중에 상당수는 정신 질환의 진단을 받지 않은 채 삶의 희망 자체를 잃어버린 이들이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사회는 청년 세대가 실패를 경험할 여유조차 주지 않는다. 실패는 곧 낙오이며, 낙오한 개인에게 사회는 충분한 재진입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노년층은 존엄한 노후를 보장받지 못한 채로 경제적 빈곤과 만성적인 질병, 그리고 가족들로부터의 외로움에 둘러싸인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의 3배 이상이며, 자살률 또한 최상위권이다. 자녀의 부양 부담이 더 이상 사회적 규범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회에서 노인은 빠르게 고립되고 그로 인해 삶의 의미를 쉽게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노인 자살을 단순히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자 하는 선택’으로 포장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실제로 많은 고령층은 “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속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자살을 선택한다. 이는 명백히 사회적 실패이다.

즉,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단순히 개인의 정신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기능이 실패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하나의 지표이다.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 성공하려면, 통계를 넘어 그 뒤에 숨겨진 구조적 요인을 반드시 살펴야 한다.

소설 『자몽살구클럽』은 네 명의 여중생이 각자의 방식으로 절망 속에 잠겨 있는 모습을 통해, 청소년이 처한 사회적 압박의 복합적 양상을 보여준다. 문학 작품이기에 일부 극적인 요소가 가미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내부에는 청소년의 삶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현실적 고통이 촘촘히 배치되어 있다. 주인공 소하는 가족의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 많은 수의 청소년은 양육자와의 정서적 유대가 약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부모의 과도한 기대, 가정 폭력 등 다양한 요인으로 정서적 고립을 경험한다. 특히 성과 중심 문화가 강한 한국 사회에서 부모 기대에 미치지 못한 아이들은 쉽게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며, 실패하는 경험을 생존의 위기로 인식하기도 한다. 소하의 고통은 바로 그러한 현실의 압축된 표상이다. 태수는 전교 회장이자 이 모임을 창설한 인물이다. 태수는 겉으로 보기에 활발해 보이지만, 정작 자신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남들에게 쉽게 털어놓지 못한다. 밖으로 터져 나오지 못한 슬픔과 눈물은 마음의 안쪽으로 흘러 사람을 굵게 만든다. 결국 태수는 학교에서 뛰어내려 생을 마감한다. 유민은 태수의 죽음으로 크나큰 상실감과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 유민에게 있어서 태수는 소심하고 내향적이던 자신을 세상 밖으로 이끌어주었던 존재였기에 태수의 부재는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을 것이다. 보현은 폐암 투병 중인 어머니와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동생을 보살피야 한다. 어렸을 때 영화감독을 꿈꾸기도 했지만,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자연스럽게 꿈을 접어야 했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느끼는 상실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제공해야 하는 정서적 안전망의 붕괴로 이어진다.

『자몽살구클럽』에서 보여준 모습은 청소년들의 현실을 모사한 것에 가깝다. 작품 속에서 아이들은 누구에게도 자신의 상처를 드러낼 수 없고, 감정이 소거된 존재로 살아간다. 그들이 자살을 선택하려고 했던 이유는 곧 ‘사회가 돌보지 못한 아이들의 슬픔’이었다. 이 소설은 이러한 현실적인 고통을 감각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청소년 자살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감정 조절 문제나 정신 질환 문제로 축소하는 시각을 거부한다. 이 소설의 중심 메시지는 결국 연대의 가능성이다. 서로를 이해하면서 고통을 드러내고, 함께 울고, 함께 절망을 나누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삶의 이유를 찾기 시작한다.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정서적 지지와 연대, 공동체의 역할을 아이들이 스스로 ‘자몽살구클럽’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그간 정부의 자살 예방 정책은 수십 년 동안 계속 발표되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 그 이유를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바로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전문 인력의 부족, 상부 구조 개입의 부재이다. 먼저 예산 문제는 자살 예방 정책 실패의 핵심이다. 정부의 자살 예방 예산은 전체 복지 예산 대비 극도로 적으며,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살이라는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정부가 과연 자살을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는지조차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담사 인건비 외에는 실질적 예방 프로그램이나 지속적 사후 관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학교나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자살 예방 센터가 존재하더라도 ‘이름뿐인 기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로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자살 예방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또 다른 원인이다. 상담사들은 연간 수천 건의 상담을 처리해야 하며, 1인당 담당하는 상담이 지나치게 많아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상담이 불가능할 정도다. 또한 상담사의 임금 수준은 낮고 고용 안정성도 부족하여 퇴사가 잦아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상담 인력이 지속적으로 이탈하는 환경에서 자살 예방의 최전선은 무력화된다. 그런데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의 구조적 방향이 잘못되어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현재 자살 예방 정책을 보면 대부분 사후 대응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단 위기가 발생한 뒤 개입하는 방식이며, 자살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상부의 개입은 거의 없다. 즉, 빈곤 완화나 청년 일자리 개선, 입시 경쟁의 완화와 주거 안정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없으면 자살률이 감소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자살 문제를 ‘심리 문제’로 치부해 왔다. 이는 마치 파이프라인 전체가 부식되어 물이 새고 있음에도 아래에서 떨어지는 물만 열심히 닦아내는 일과 다르지 않다. 자살 예방 정책은 개인 상담이나 위기 개입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자살의 근본 원인은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구조 전체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자살률은 절대 줄어 들 수 없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과도한 경쟁 구조 때문이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1등만이 살아남는다’는 메시지를 내면화하도록 강요받는다. 학교에서 내신 경쟁과 대입 경쟁을 거쳐 사회로 나가면 취업 경쟁과 승진을 위한 경쟁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되고 서열화된다. 게다가 교육은 성취와 평가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학생의 정서적 발달이나 자아 확립보다는 성적이라는 점수로 개인을 평가한다. 그 결과 많은 학생들은 성적과 자존감을 동일시하며, 성취하지 못한 자신을 몰가치 하다고 느낀다. 이는 자살 위험 요인 중 대표적인 자기 비난과 무력감으로 이어진다. 청년층의 경우에는 과도한 경쟁이 불안정 노동 환경과 결합하여 더 치명적이다. 일단 취업이 어렵고, 어렵게 취업한 뒤에도 비정규직이거나 단기 계약직 등 고용 안정성이 낮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미래가 없다”고 느끼며 이런 절망은 자살에 대한 위험성을 크게 높인다. 노년층은 비교적 치열한 경쟁에서 밀려난 후 사회적 고립과 빈곤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린다. 정년퇴직하고 난 후에는 사회적 지위가 사라지고, 강한 공동체주의가 사라진 사회에서 노인은 쉽게 고립되기 마련이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고립은 결국 자살로 쉽게 이어진다. 결국 우리는 생애 전반에서 경쟁이 개인의 삶을 모조리 잠식하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경쟁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긍정적 역할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개인을 생존의 벼랑으로 내모는 위험 요소로 작동한다. 자살은 이러한 경쟁 구조가 가장 취약한 개인에게 가하는 최후의 폭력이다.

우리 사회에서 자살 문제는 경쟁 구조뿐 아니라 공동체의 붕괴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가족과 학교, 지역사회와 일하는 직장 속에서 관계가 점점 약화하면 쉽게 고립되기 마련이다. 고립은 자살 위험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젊은 세대는 가족 간의 정서적 소통이 줄어들고, 부모는 경제적 생존에 몰두하느라 충분한 돌봄을 제공할 시간이 부족하다. 아이들은 문제가 생겨도 이야기할 대상이 없고,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배우지 못하지만, 단지 마음의 고통을 겉으로 드러내지 말라고 암묵적으로 배우면서 자란다. 노년층은 1인 가구의 증가와 가족주의의 해체로 인해 고독사 위험에 놓인다. 과거에는 가족이 돌봄의 중심이었다면 오늘날 가족의 형태는 다양해졌고 가족의 역할도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급속도로 이어진 가족주의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그 빈자리를 메우지 못했다. 지역사회의 공동체주의는 더 빠르게 붕괴하였다. 더 이상 이웃 간의 안부를 묻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멀어졌고, 지역 기반의 공동체 프로그램이나 공공 서비스도 부실하거나 미비해졌다. 지역 사회마저 해체되면서 고립은 더더욱 심해지고, 결국 자살 위험을 높이는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몽살구클럽』 속 아이들이 겪는 고립감은 바로 이 공동체 붕괴의 직접적 결과라고 해도

과연이 아니다. 그들의 자살 충동은 단지 정신적인 약함 때문이 아니라, 사회가 제공해야 할 돌봄과 연대가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신건강 지원 체계가 갖는 구조적인 취약성은 자살률이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의 정신 의료 체계는 외형적으로는 ‘접근성이 좋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도심 곳곳에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이 존재하며, 진료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 실제로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은 세 가지의 장벽에 가로막힌다. 바로 경제적 장벽과 사회문화적 장벽, 그리고 구조적 시스템의 병목현상이다. 정신과 진료는 대부분 비급여 항목이며, 심리치료나 인지 행동 치료를 비롯한 검사 비용이 매우 많이 든다. 치료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으나, 회당 6만~15만 원을 발생시키는 진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특히 청년층과 취약계층은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아예 시작하지 못한다. 경제적 제약이 치료 접근성을 가로막는 상황에서, “치료받고 싶으나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절망”은 오히려 더 심해진다. 이는 결국 자살 위험을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정신과 진료에 대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낙인(Stigma)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지금 당장 정신과 진료를 받는다고 한다면 주변에서 “문제가 있다”라거나 “정신적으로 이상하다” 또는 “마음이 약하다”는 비난을 받을까 봐 두려워 진료를 피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의 허락이 필요한데, 부모가 정신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면 아이는 도움받을 기회를 잃어버린다. 이는 『자몽살구클럽』의 인물들이 자신들의 고통을 가족에게 털어놓을 수 없었던 상황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다. 대다수의 부모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의 정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아이가 겪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으며, 감정적인 소통조차 회피한다. 가정에서 정서적 돌봄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부모 세대 또한 감정 표현을 억압하는 사회문화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이다.

정신건강 서비스의 구조적 병목 또한 심각하다. 국립 정신 건강 센터의 경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며, 일선 지역의 심리 상담 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사들은 낮은 임금 대비 많은 업무와 비정규직 계약 등으로 인해 번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e)을 경험하곤 한다. 상담사 한 명이 수백 명의 사례를 동시에 담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담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건에서 개별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사후관리 또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사업도 도입하였으나, 시간 편차가 매우 크고 실제 현장에서 담당 인력이 부족한 건 마찬가지다. 위기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즉시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병원 밖으로 나가는 순간 다시 구조적 고립 속에 방치되는 것이 바로 현재의 자살 예방 시스템이다. 즉, 치료의 문은 열려 있지만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들어가더라도 오래 머물 수 없다.

한국 언론은 자살 보도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드러내 왔다. ‘자살보도 권고기준’이 2004년 도입된 이후로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보도 방식이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자극적인 기사 제목과 유명인의 자살 묘사, 유튜브와 SNS에서의 무분별한 소비 행태는 모방 자살을 유발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자살 사건은 쉽게 ‘가십거리’로 소비되며, 언론은 조회 수와 광고 수익을 위해 개인의 죽음을 상품화한다. 이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폭력이다. 특히 유명인의 자살 보도 직후 일반인의 자살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베르테르 효과’는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방법 묘사나 사진과 동영상 노출, 주변인의 증언들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기폭제로 작용한다. 언론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보도를 내보낸다. 함부로 유서를 공개한다거나 유족과의 인터뷰 등으로 생전 고인에 대해 취재하려고 하는 행태는 여전하다. 이는 비단 레거시 미디어뿐 아니라 유튜브를 비롯한 뉴미디어에서 확대 재생산된다.

언론의 무책임은 단순히 ‘부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성의 결여’를 의미한다. 언론이 자살을 다루는 방식은 사회가 생명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를 드러낸다. 언론은 죽음을 추모와 애도의 장(場)으로 만들기보다, 일종의 ‘소비재’처럼 다루며 심리적 안정과 치유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자몽살구클럽』에서 어른들이 아이들의 고통을 눈앞에 두고도 이해하려 하지 않는 모습과 정확히 중첩된다. 미디어의 무관심과 정보의 과잉은 청소년과 취약 계층에게 “사회는 너희의 죽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메시지

를 던지면서 또 다른 절망을 낳는다. 반대로 언론이 자살과 관련된 보도를 줄임으로써 자살을 줄일 수 있다는 '파파게노 효과' 또한 연구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자해하고 회복된 사례를 소개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하는 등 생명의 소중함을 성찰하게 하는 언론 보도는 자살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언론은 파파게노 효과를 충분히 실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적 책임보다는 자본주의 시장 경쟁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청소년의 자살률이 높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교육 체계의 폭력성을 빼놓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오랜 기간 동안 '사람을 성장시키는 교육'이 아닌 '사람을 선발하고 평가하는 교육'에 가까웠다. 학생들은 어린 시절부터 점수로 평가받고, 성과만이 곧 가치라는 논리 속에서 자라난다. 그러면서 감정은 점점 사치가 되고, 실패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경험으로 내면화된다. 청소년 자살의 주요 요인이 학업 스트레스라는 사실은 여러 통계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공부가 힘들어서"의 차원이 아니다. 학생들은 성적이 좋은 학생만 주목받고, 경쟁에서 이긴 학생만 살아남는 구조 속에서 자신이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청소년기에 학업은 삶의 일부가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이유' 그 자체가 되어버린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실패를 극복할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작은 좌절에도 쉽게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게 된다. 학생들이 죽음을 고민하는 이유는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학교라는 공간이 본질적으로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 '평가의 공간', '감시의 공간', '경쟁의 공간'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학교가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은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는 또래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그조차 불가능하기도 하다. 교육이 학생들에게 "너는 점수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던지는 한, 청소년 자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청소년에게 중요한 것은 성취감보다 내적인 성장이며, 학업이 아니라 인간관계이고, 경쟁이 아니라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의 중요성이다. 『자몽살구클럽』에서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청년층의 자살 또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온전히 드러낸다. 청년들은 학업 경쟁을 통과하면 취업 경쟁이 기다리고 있고, 취업한다 해도 평생직장이 사라진 노동시장 속에서 불안정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 날이 갈수록 오르는 주거비와 점점 늘어나는 비정규직, 높은 청년 실업률, 결혼과 출산의 경제적 부담은 청년 세대를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세대'로 만들고 있다. 청년층의 자살을 단순히 개인의 우울로 설명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일이다. 많은 청년이 자살 충동을 느끼는 이유는 "삶의 지속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들은 장기적인 삶의 목표를 세우기 어렵다. 사회는 청년의 삶을 경제적 구조 속에서 '비효율적 존재'로 취급하며, 청년 스스로 자신을 사회에 기여하지 못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자존감의 붕괴는 다시 우울감으로 이어지고, 우울감은 절망의 골을 더 깊게 만든다.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는 경제 구조와 복지 정책의 잘못된 방향성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 우리 사회는 청년에게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지만, 청년의 삶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의 커다란 벽 앞에 가로막혀 있다. 『자몽살구클럽』에서 청소년들이 절망하는 이유와 청년층이 절망하는 이유는 사실상 동일한 구조에서 비롯된다. 사회는 청소년에게 높은 성적을 요구하고, 청년에게는 '즉시 사회에 기여하라'고 명령한다.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사회는 결국 젊은 세대를 희생시키며, 청년들의 죽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낳은 비극이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자살을 '개인의 선택' 혹은 '정서적 취약성의 결과'로 보는 태도가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이는 극도로 위험한 담론이다. 자살은 사회 구조가 개인을 압박한 결과이며 단지 개인적인 문제로 축소하면 사회와 국가의 책임은 사라지게 된다.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 규정하는 담론은 크게 세 가지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 우선, 개인은 자신의 절망을 표현하기 어렵다. '약해 보이고 싶지 않다', '정신적으로 불안해 보이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 때문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 사람도 침묵하게 만든다. 이는 자살 위험을 더 높이게 만든다. 다음으로 우리 사회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자살이 개인의 선택이라면 사회는 책임이 없고 국가도 개입할 이유가 없어진다. 결국 정책적 무위로 이어지고, 자살률은 줄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이런 담론은 자살 유족과 극복한 생존자들에게 또 다른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 유족은 도와주지 못한 죄책감과 주변에서의 낙인 효과를 이중으로 짊어지며, 그로 인한 사회적 고립에 시달리게 된다. 자살에서 극복한 생존자들은 자신의 선택을 '실패'로 생각하며 다시금 자살 충동을 느끼기도 한다. 자살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폭력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일이다. 『자몽살구클럽』은 이러한 왜곡된 담론에 균열

을 낸다. 작품 속의 인물들이 경험하는 절망은 결코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구조에 의해 형성된 고통이다. 그들의 상처는 사회가 만들어낸 상처이며, 그들의 절망은 구조적 병리의 결과이다.

문학은 사회의 어둠을 비추는 거울이자, 동시에 그 어둠 속에서 길을 찾도록 돕는 거대한 등불이다. 『자몽살구클럽』은 자살을 소재로 삼지만, 죽음을 미화하거나 충격 요소로 삼지 않는다. 오히려 생존을 위한 연대의 중요성을 깊은 서사로 풀어내면서 문학이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자살을 결심한 아이들의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을 서로가 이해했을 때 생겨나는 변화’이다. 사회가 제공해야 할 돌봄과 연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서로의 연대를 통해 새로운 생존의 의미를 발견한다. 이는 단지 청소년에게만 적용되는 메시지가 아니다. 사회 전체가 서로의 고통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피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자살이라는 비극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작품 속 아이들은 모두 고립되어 있었고, 말할 수 없는 상처 속에 갇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드러내며, 서로에게 각자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어준다.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관계적 돌봄’이며, 『자몽살구클럽』이 보여주는 연대의 복원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 중요한 사회적 가치이다.

한국의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심리 상담이나 사후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접근이 아니다. 사회 전체가 변해야 한다. 교육과 노동, 경제 등 전반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구조가 아니라 보호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생명에 대한 존중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가족과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가 각자 역할을 나눠 개인의 마음 상태를 살피고 관찰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신건강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비급여 중심 의료 체계도 급여 대상으로 확대 전환하여 누구나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한편, 언론은 그동안의 보도 문화와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살을 선정적으로 다루는 보도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하고, 생명 존중을 기반으로 한 보도 원칙을 법제화해야 한다. 정부는 정책의 초점을 예방 대책이 아닌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빈곤 문제와 주거 불안정, 고용 구조와 과도한 입시 경쟁 등 자살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 정책만이야말로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자몽살구클럽』은 단지 청소년들의 자살을 다룬 소설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비극을 비판적으로 드러내는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연대의 회복만이 자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이라는 사실을 문학적인 감동을 통해 보여준다. 우리가 이 작품이 던지는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한국 사회가 ‘자살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서로의 고통을 돌보는 나라’로 불릴 날이 오리라는 희망을 품어본다.

* 배*휘 - 책을 읽고 느낀 점

책을 읽으면서, 주인공들(보현, 소하, 유민, 태수)이 삶의 고통을 표현할 곳이 없어 결국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절망에 이르게 된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의 '자살 유예 클럽'은 어른들의 눈에는 철없는 일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구조적인 압박에 짓눌린 청소년들이 선택한 최후의 자구책이었다. 이러한 참담한 현실은 자몽살구클럽 앨범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발랄함이 대표되는 분위기일 수 있지만 어딘지 모르게 조금 불안하고 우울한 분위기가 감도는 느낌을 주는 곡들이 책의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보다 신중하고 자세하게 들렸던 것이었다. 또 내용적인 부분 이외에도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책, 음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해보게 만드는 과정이 매우 흥미로웠다고도 평가할 수 있었다.

『천현우 - 쫓바람일지』를 읽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자몽 살구 클럽』 속 청소년들의 고통은 개인의 나약함 때문이 아니었다. 이 소설은 한국 사회가 만들어낸 구조적 압박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에게 학교 성적, 비교, 경쟁에서 이길 것을 끊임없이 요구했다. 또한 이들이 겪는 가정 내 폭력과 무관심,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었다. 결국 아이들은 "살아보고 싶은 이

유"를 찾기 힘든 환경에 놓여 있었다. 소설 속 네 주인공은 결코 특별한 아이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수많은 청소년의 축소판처럼 느껴졌다. 가장 완벽해 보였던 태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은 사회가 그들에게 '잘 참는 능력'을 기대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다.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나 노력 부족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었다. 아이들을 내모는 사회를 먼저 바꿔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이 던지는 핵심 메시지였다. 이 절망적인 상황의 가장 큰 원인과 이유는 사회가 만들어낸 것이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이 여전히 최상위권인 것처럼, 자살률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여전히 벗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선량한 노동자들을 그저 걸어 다니는 기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로 취급하는 사회적 시선과 대우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유사하다. 청소년들의 고통과 상처 역시 당연한 현상이라며 등한시하고 '잘 참는 능력'을 기대하는 사회의 무책임한 모습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법과 정책이 만들어져도 노동자나 청소년들이 피부로 느껴야 할 실질적인 정책은 아직까지 한국에 완벽히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책을 읽고 현재 한국 언론이 자살이라는 의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사건 중심적'이고 '클릭 수에 눈이 먼' 보도 행태라는 인상을 받았다. 『자몽 살구 클럽』의 결말처럼, 태수가 죽음으로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남겨진 친구들이 깨달음을 얻는 것처럼, 언론 역시 사회·경제적 입지가 큰 '스케일'의 자살 사건이 터져야만 일제히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언론은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결과가 발생한 후에야 그 경위를 쫓는 데 집중할 뿐, '아이들을 내모는 사회'를 먼저 바꿔야 한다는 본질적인 메시지나 보다 광범위한 청소년 노동/심리 형태를 파악하는 데는 소홀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살고 싶다는 말은 혼자서 할 수 없다'는 책의 핵심 메시지를 사회 전체에 전달하기 위해, 사건의 극적 요소보다 '살아보고 싶은 이유'를 잃은 수많은 '보현·태수·유민·소하'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이 언론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 김*현 - 책을 읽고 느낀 점

자몽살구클럽의 저자인 한로로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책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 알게 되었다. 당시 교내에서 우수 동아리 경진대회를 준비하던 중 우연히 연주하게 된 곡을 계기로 마주하게 되었다. 밴드 활동을 하던 필자에게는 책보다 가수로서의 한로로가 더 익숙했다. 북클럽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자몽살구클럽을 처음 마주했던 것은 같은 활동을 준비하던 바이어린 팀원의 추천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 책의 제목의 자살을 암시하고 있고 주제가 자살과 관련된 것이란 사실은 주변에서 들려오던 이야기로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책을 펼치고 난 후의 내용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인터넷상에서 자몽살구클럽에 대한 평가 중 소설 90%, 노래 90%로 따로 듣거나 읽으면 완성되지 않은 듯한 느낌을 준다는 평가에 동의한다. 그러나 같이 어우러졌을 때의 완성도는 100%에 달한다. 저자는 이 책의 제목인 자몽살구클럽으로 앨범을 선보였다. 평소에 책을 읽을 때 잔잔한 재즈나 클래식을 배경 삼아 듣곤 했지만, 이처럼 책과 음악의 세계관이 연결된 채로 감상한 적은 처음이었다. 책을 즐기는 무수히 많은 방법 중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을 깨닫게 된 것 같아 색다른 경험이 되었다. 책의 내용은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소하, 태하, 유민, 보현이 서로의 자살을 막기 위해 2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로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자살을 생각할 수밖에 없던 일들과 그럼에도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로 남겨질 이유를 찾는 내용이다. 불우한 가정환경과 폭력 속에서 마지막 희망으로 '자몽살구클럽'의 티켓을 쥐었던 소하, 6살배기 동생과 아픈 어머니를 등에 지고 현실과 꿈 사이의 갈림길에서 방황하던 보현, 성적에 대한 압박감과 정서적 학대로 자몽살구클럽의 걸을 떠난 태수, 그런 태수를 보내줄 수 없어 삶의 이유를 찾지 못했던 유민이. 소설 속 주인공들이지만 첫 장의 쓰인 작가의 말('이 세상의 모든 소하, 태수, 유민, 보현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처럼 어딘가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낸,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어쩌면 그들은 우리의 곁에 있는 친구, 동료, 동생, 형, 누나 가령 옆집에 살던 소꿉친구였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는 살아남은 이들이지 않을까.

책을 읽고 난 후 팀원들과 함께 모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은 책을 읽고 나서 다양한 입장과 생각을 나눌 수 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자몽살구클럽에 대한 평가는 팀원들 사이에서도 극명하게 입장이 나뉘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중 하나 만에 몰두해 있던 나에게 다른 각도의 시각을 갖게 해주었는데, 예를 들면 이 책이 자살 미화의 일종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었다. 주인공 중 하나인 태수는 결국 친구들의 곁을 떠난다. 다만 태수가 떠나기 전 남긴 메모와 행동들이 다른 등장인물들에 '멋지게' 기억된다는 이유였다. 이 외에도 등장인물들의 전체적인 연령대는 14~16세 사이의 여중생들이었지만, 그 나이대라고 믿기 힘든 사고력과 심리적 묘사는 현실과 동떨어진 느낌을 받았다. 또한 언론의 자살 보도가 현실의 자살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베르테르 효과(Werthern Effect)'와 '파파게노 효과(Papageno Effect)'에 대해서도 이번 계기를 통해 알게 되었다. 이 두 가지 이론은 상반된 개념을 갖는다. 우선 베르테르 효과 (Werther Effect)는 특정 자살 사건이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질 때, 이를 본 사람들이 자살을 모방해 실제 자살률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말한다. 자몽살구클럽을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자살 미화의 텍스트로 비평할 부분이 존재하며, 이는 자신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을 넘어 타인의 생명마저 가벼이 여길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 다른 이론인 파파게노 효과(Papageno Effect)는 언론이 자살 보도를 자제하거나, 사건을 신중하게 다루고, 자살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거나 희망적 극복 사례를 보도하는 경우, 실제 사회의 자살률이 감소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는 언론이 신중하게 사건을 다루고 극복 사례나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아 보도한다면 사회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시각의 차이에도 자살이 개인의 선택이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재난으로서의 결과임은 팀원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이다. 자살 보도는 언론의 공적인 지위만큼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이는 실제 취약한 개인으로 하여금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에 언론은 항상 신중하게 사건을 다루기 위해 힘쓰며 자살 보도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 국내 언론에서는 비교적 최근까지 자살을 암시하는 '극단적 선택'이란 말로 자살을 사회적 재난의 결과가 아닌 개인적 선택과 책임으로 떠넘길 여지를 남겼다. 지금은 가이드라인과 규제로 사장된 표현이지만, 이것이 우리 사회에 미쳤을 영향은 간과할 수 없다. 이처럼 언론의 자살 보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활동 자료



북클럽 팀명	바이라인					
일시/장소	일시	북클럽 기간 내 개인당 1회 제출			장소	비대면
참여 인원	학과	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학번	2020****	이름	김*아
	학과	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학번	2021****	이름	장*림
	학과	법학과	학번	2021****	이름	정*성
	학과	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학번	2021****	이름	최*수
	학과	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학번	2022****	이름	배*휘
	학과	사회학과	학번	2024****	이름	김*현
	참석인원(명)		6/6		참가자 대표	최*수 (서명)
도서	도서명	월든			저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
	출판사	민음사	출판연도	2021.11.12	번역자	정희성
오늘의 북클럽 주제		삶: 자연				
활동 내용 & 방법						
<p>1. 활동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리터러시 활동 <p>2.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 중 '자연환경'에 관련된 것을 찾아 비평문 작성. 						
활동 결과						
<p>* 최*수 (참가자대표)</p> <p>1. 뉴스 제목</p> <p>“백로의 귀환은 환경 회복의 신호”</p> <p>2. 링크</p> <p>https://www.wonju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309&page=2&total=2040</p> <p>3. 이에 대한 비평</p> <p>원주 도심을 가로지르며 청쾌하게 흐르는 원주천. 그곳에 시민과학자들에 손길이 닿았다. 본래 자연은 인간 주도가 아니라 국가 주도로 보호됐는데, 시민과학자들이 직접 자료를 채취하고 분석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동물들을 보호하는 것에 앞장서고 있다. 원주천은 도심을 가로지르며 도심 속 자연생물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다. 원주천뿐만 아니라 원주라는 도시에 있는 자연환경을 전체적으로 아카이빙하면서 생태 회복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었다.</p> <p>월든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도시밖으로 나가 자연환경 속에서 사는 것은 현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불가능에 가깝다. 이제는 월든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려는 노력보다 그 책에서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태도를 도심 속에서 실천할 방법을 찾아야 할 때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원주시의 이번 시민과학자 프로젝트는 우리가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공존하고, 나아가 자연을 회복하는 것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p>						

좋은 사례다.

언론 역시 거대한 자연 변화를 보도하는 것은 물론 이런 지역 사례를 보도함으로써 자연환경 보호의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고 공유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이런 보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속성이다. 단발성 보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학자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 및 종료 시점을 꾸준히 동행함으로써 이 활동을 통해 자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개선됐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물론 이 활동이 직접적으로 자연환경을 회복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연환경을 관찰하고 기록하려는 노력만으로도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태도에 가까워진다는 것에는 반문할 여지가 없다. 공존은 같은 곳에 공생하고 있다는 인식에서부터 시작된다.

* 김*아

1. 뉴스 제목

김택중. (2025). 『노인과 바다』의 서술에 드러난 인간 인식 너머의 자연. 문학과환경, 24(3), 125-144.

2. 링크

논문이므로 링크 없음.

3. 이에 대한 비평

자연과 관련된 논문을 읽었다. 논문의 초록을 인용하면 “리베카 래글론과 마리안 솔트마이어는 언어와 문학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변화를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생태비평은 문학 작품에서 인간의 언어에 의해 정의내림을 끊임없이 거부하는 자연의 모습, 즉 “자연의 눈부신 이상함”이 드러나는 순간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 대한 생태주의적인 접근은 대부분 주인공인 산티아고의 자연관이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작품에서 그려지는 자연의 모습이다. 자연은 한결같이 눈으로 보거나 느낄 수 있지만 명확하게 묘사할 수 없는 영역의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은 작품의 중요한 장면마다 등장하는 ‘이상한’이라는 의미의 단어에 의해 구현되고 있다. 햇빛이나 바다와 같은 자연을 묘사하는 부분에서도 항상 ‘이상한’으로 표현되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고, 주인공인 산티아고 뿐 아니라 청새치, 심지어 적으로 묘사되는 상어에게서도 특정할 수 없는 ‘이상한’ 특징, 존중해야 할 무언가가 있음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표현의 양상은 인간 인식의 영역에 자연이 존재하지만 완전하게 인지할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작품의 서술은 끊임없이 정의내림을 거부하는 자연의 모습을 ‘이상한’이라는 의미의 단어로 묘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자연을 안다고 착각한다. 주말마다 산을 찾고, 바다를 보며 휴식을 취할 때 우리는 자연을 친숙한 친구나 안식처로 규정한다. 하지만 리베카 래글론과 마리안 솔트마이어가 지적했듯, 자연은 끊임없이 인간의 언어에 의한 정의 내림을 거부한다.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서 산티아고 노인이 바다와 청새치, 심지어 상어를 마주하며 끊임없이 '이상한 (strange)'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연이 인간의 인식 범위를 벗어난 곳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 '알 수 없음(이상함)'이 역설적으로 인간에게 어떤 치유와 경외를 주는지, 그리고 자연의 일부이면서도 자연을 소유하려 드는 인간의 모순된 태도를 어떻게 재정립해야 하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우리가 자연에서 치유를 얻는 것은 그것이 익숙해서가 아니라, 나의 이해와 통제를 벗어난 거대한 질서가 존재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세계가 나를 감싸고 있다는 느낌, 그 '눈부신 이상함' 앞에서 우리는 일상의 팍팍한 논리를 내려놓고 쉴 수 있다. 즉, 자연이 주는 치유는 '완벽한 이해'가 아닌 '기분 좋은 행복'에서 온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과 자연 관계의 흥미로운 모순에 직면한다. 생물학적으로 인간은 거대한 자연 생태계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관점에서 자연을 '일부분'으로 축소하려 한다. 우리는 풍경을 사진에 담아 소유하려 하고, 집에 화분을 들이며 자연의 조각을 곁에 두려 한다.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국 그것을 곁에 두고 싶은 소유욕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앞서 논했듯 자연은 '이상

한' 것이며 정의 내림을 거부하는 존재다. 우리는 바다의 파도 소리를 녹음할 수는 있어도 바다 그 자체를 가져올 수는 없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분을 가질 수는 있으나, 결코 그 전체를 소유하거나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가질 수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오만을 저지르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해답은 산티아고 노인이 느꼈던 그 '이상함'을 인정하는 태도에 있다. 자연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추억과 쉼을 제공하지만, 그것은 인간이 자연을 정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연이 우리를 품어주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연의 '눈부신 이상함'을 억지로 해석하거나 우리의 삶 속으로 완벽히 끌어들이려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자연의 일부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신비가 존재함을 존중해야 한다.

* 장*림

1. 뉴스 제목

[서울시] 침체된 세운지구, 빌딩숲과 나무숲이 공존하는 '녹지생태도심'으로 재탄생

2. 링크

<https://www.water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835>

3. 이에 대한 비평

‘녹지’라는 포장지에 싸인 욕망의 마천루: 세운지구 개발론의 허와 실

서울시가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은 그 이름만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매혹적이다. 삭막한 도심 한복판에 북악산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녹지축을 만들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는 청사진에 반기를 들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워터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낡고 위험한 세운상가 군을 허물고 그 자리에 5만㎡의 대규모 공원을 조성해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화려한 조감도와 생태, 휴식, 역사라는 미사여구를 한 꺼풀 벗겨내면, 그 안에는 ‘고밀도 개발’이라는 자본의 거친 욕망이 도사리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은 서울시가 내세우는 ‘녹지’가 철저히 ‘거래의 산물’이라는 사실이다. 기사는 민간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과 높이 규제를 완화해 확보한 개발 이익으로 공원을 조성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시민에게 주어지는 한 줌의 녹지는 도시의 하늘을 뺏겨 마천루로 채우는 대가로 얻어지는 조건부 전리품인 셈이다. 이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경계했던 ‘길들여진 자연’, 혹은 인간의 탐욕을 가리기 위한 조경용 장식품에 불과하다. 초고층 빌딩 숲에서 뿜어져 나올 막대한 탄소와 에너지 소비, 그리고 그 거대한 콘크리트 벽에 갇힌 녹지를 진정한 의미의 ‘생태 도심’이라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는 생태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해 생태라는 명분을 차용한 전형적인 ‘그린워싱(Greenwashing)’에 가깝다.

또한, 이번 개발 계획은 ‘남음’을 곧 ‘청산해야 할 악’으로 규정하는 위험한 이분법에 기초하고 있다. 기사는 세운지구를 “가장 낙후된 지역”, “화재와 붕괴에 취약한 곳”으로 묘사하며 전면 철거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물론 시민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정비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 해결책이 오로지 짝을 밀어버리고 새로 짓는 전면 재개발이어야만 하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세운지구는 수십 년간 도심 제조업의 생태계를 지탱해 온 장인들과 상인들의 삶의 터전이자, 서울의 근현대사가 켜켜이 쌓인 유기적인 공간이다. 서울시는 이곳을 ‘도심공동화의 상징’이라 폄하하지만, 정작 그곳에 흐르는 인문학적 생태계와 역사적 맥락은 ‘경제적 효용성’이라는 잣대 아래 가차 없이 삭제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는 소로가 우려했던, 시장 가치로 환산되지 않는 고유한 삶의 가치(인디언의 바구니)를 외면하는 태도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

문화재 보호와 경관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 역시 편의적이다. 기사에서 서울시는 세운지구가 중요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100m 이상 떨어져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자체적인 양각 기준을 적용해 경관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140m가 넘는 고층 빌딩들이 병풍처럼 중요 앞을 가로막는 상황에서, 물리적 거리나 건물 높이를 조금 조절한다고 해서 역사 경관이 보존된다고 말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한국의 전통적 입면 계획을 적용해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 역시, 역사적 맥락을 지운 자리에 깎대기 뿐인 전통 문양을 입혀 면죄부를 얻으려는 알리바이에 불과해 보인다.

결국 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미래의 문을 여는 변화”는, 과거를 지우고 자본의 논리로 쌓아 올린 수직의 성채를 의미하는 듯하다. 진정한 ‘녹지생태도심’은 마천루 사이의 인공 정원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도시의 시간과 사람, 그리고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신중하게 고민하는 데서 시작된다. 화려한 개발 이익으로 치장된 공원보다는, 투박하더라도 그곳에 깃든 삶을 존중하는 재생 방식이 서울에 더 필요한 미래가 아닐까. 언론 역시 서울시가 배포한 화려한 청사진을 받아쓰는 것을 넘어, 그 개발의 그늘에서 사라져 가는 것들의 가치를 묻고 따지는 비판적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 정*성

1. 뉴스 제목

기후 총회 COP30 빈손 폐막과 언론의 시각 차이 (COP30 보도 종합평가)

2. 링크

종합평가이므로 따로 링크 없음.

3. 이에 대한 비평

지구적 기후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파리협정 체결 10년을 맞은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가 최근 브라질 벨렝에서 막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회의는 화석연료 감축 로드맵 합의에 실패하며 사실상 빈손 폐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 언론들은 이러한 COP30 결과를 두고 저마다 다른 각도에서 문제점을 짚어내고 있다. 국제 합의 실패의 원인과 평가,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한 시각 차이가 특히 두드러진다. 이에 세계일보와 매일경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 다양한 국내의 언론 보도를 비교하며, 이번 기후 총회 결과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COP30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 문구는 끝내 최종 선언문에 담기지 못했다. 세계일보는 회의 결과를 두고 ‘맹탕 COP30’이라는 표현을 쓰며,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산유국들의 완강한 반대와 미국의 이탈이 화석연료 감축 합의 불발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고 COP30에도 정부 대표단을 보내지 않음으로써 국제 공조에 빈틈을 만들었고, 이는 반대국에 힘을 실어주었다는 분석한다. 중앙일보 역시 미국의 불참과 중국의 소극적 태도로 글로벌 기후 리더십의 부재가 드러났다고 지적한다. 중국은 미국의 공백 속에 기후 외교 영향력을 키우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정작 화석연료 감축에는 적극적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처럼 주요 배출국들의 소극적인 참여 속에 COP30은 기후 위기 대응에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회의에서 채택된 ‘무치량 선언’이 해수면 상승과 폭풍, 가뭄 등 재난에 대비한 재원의 3배 증액 등의 내용을 담았지만, 이는 상징적 선언에 그칠 뿐 실질적 이행 방안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합의를 두고 “석유와 가스, 석탄 산업계의 승리”라 평하며, 파리협정 체결 당시와 비교해 국제 정치 환경이 한층 후퇴했음을 꼬집었다. 실제 주요 산유국의 반발로 화석연료 관련 문구가 삭제된 상황에 대해, 세계자연기금 글로벌 기후 책임자인 풀가르-비달은 “장밋빛 약속은 넘쳤지만, 구체적 로드맵과 실효적 해결책이 없었다”며 실망을 표했다. 다만 일각에선 다자 협력의 맥을 이어갔다는 최소한의 의의를 찾기도 한다. 메리 로빈슨 아일랜드 전 대통령은 “선언문이 완벽하지 않고 과학의 요구에 못 미치지만, 다자주의가 시험대인 시기에 각국이 함께 전진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유럽 연합과 취약국들을 중심으로 한 대응 노력도 언론에 포착되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합의문 초안에서 화석연료 언급이 빠지자, 유럽을 비롯한 아시아와 태평양 도서국 등 30개국이 벨렝 회의 마지막 날 의장국 브라질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에는 우리나라도 동참하여 “화석연료 퇴출 로드맵이 포함되지 않은 결과는 지지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전한다. 즉, 일부 국가들은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전환을 공식 합의문에 담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의문

에서 관련 문구가 빠지자, 회의는 하루 연장된 끝에 빈손으로 폐막하고 말았다. 국제사회 공조의 어려움에 대해 매일경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기후 재원 분담 이견도 여전하여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았다고 짚었다. 요컨대, 글로벌 대타협 부재와 책임 공방 속에 COP30은 파리협정 10년의 기대와 달리 큰 성과 없이 막을 내리, 각국의 의지 부족을 드러낸 셈이다.

COP30에 임한 우리 정부의 자세에 대해서도 언론들의 논조는 엇갈린다. 중앙일보는 한국이 이번 총회에서 나름의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라는 높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발표하고, 아시아 국가 중 두 번째로 국제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하여 2040년까지 석탄 발전 전면 중단을 공식 선언하는 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는 것이다. 이는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선도적 약속을 내놓은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탈석탄 선언'은 COP30에서 주요 이슈 중 하나였고, 이러한 국내 정책 변화는 산업계 전반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국일보 기사에서도 우리나라가 앞서 언급한 30개국 공동 서한에 동참하는 등 다자 협력에 기여했다고 전하면서 적극적인 기여를 부각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조선일보는 전혀 다른 시각을 내놓았다. 조선일보 보도와 사설은 우리 정부의 태도를 “혼자만 급가속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정책 실효성과 부담을 문제 삼았다. 조선일보는 특히 우리 정부의 2035년 NDC 상향과 PPCA 가입을 두고 “비현실적인 감축목표로 스스로 족쇄를 채웠다”고 혹평했다.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 미국도 동참하지 않고, 석탄 의존도가 높은 일본마저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가입을 유보한 상황에서 우리만 혼자 석탄 발전 중단을 선언해 봐야 기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이러한 조치는 “국가 산업보다 환경 시민단체를 더 의식한 것”이라고 깎아내리면서, 산업 경쟁력 약화와 에너지 안보 위협을 우려했다. 심지어 해당 사설은 원전과 석탄을 동시에 제약하면서 재생에너지로만 대응하려는 정책을 ‘자해 행위’로 칭하고, “환경 모범생 집착을 버려야 한다, 나라는 환경 탈레반의 놀이터가 될 수 없다”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했다. 그만큼 조선일보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탄소 감축 정책을 ‘과속’으로 규정하며 부정적으로 그린 셈이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시각에는 기후 위기 대응보다 경제와 산업계의 피해를 우려하는 인식이 짙게 배어 있다. 반면 중앙일보나 한국일보 등은 정부의 정책적 리더십을 긍정적으로 조명하거나 최소한 사실대로 전달하면서, 정작 문제는 국제 공조의 부진에 있다는 논조를 보여준다. 매일경제의 경우 경제지답게 국제회의를 배경과 함께 알기 쉽게 풀어쓰면서도, 미국 불참과 NDC 제출 지연 등 현실적 어려움을 짚고 있어 비교적 중립적으로 평가했다. 결과적으로 언론 보도에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앞장서는 한국”과 “주변 상황도 안 좋는데 우리만 앞서간다”는 두 프레임이 공존한다. 이는 동일한 사실을 두고도 각 언론사가 강조하는 가치와 우선순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COP30 결과를 다루는 국내 언론들의 논조 차이는 기후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의 스펙트럼을 잘 드러낸다. 일부 언론은 국제사회의 책임을 방임하고 제도적 한계에 초점을 맞추며 더 강력한 다자 협력을 요구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정책의 현실성과 경제적 영향을 부각하며 신중론을 편다. 이러한 시각 차이는 기후 위기 대응에서 흔히 직면하는 딜레마, 즉 지구적 공익 대 국가적 이해의 충돌을 반영한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 1.5°C 제한이라는 파리협정 목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극단으로 치우친 접근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사실이다. 기후 위기는 과학이 경고하는 지구 종말에 대한 현실이며, 대응을 미룰수록 사회경제적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럼에도 국제 무대에서는 주요 배출국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과감한 합의가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 그러나 재난과 기후 위기에는 국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언론은 이러한 현실을 냉철히 짚어주는 한편, 어떻게 균형 잡힌 해법을 모색할지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예컨대 우리나라처럼 기후 정책을 선도하려는 국가들의 노력은 장기적으로 국제사회의 기준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반면 국내 취약 산업과 노동자에 대한 대책 없이 급격한 전환을 추진할 경우 내부적 반발을 초래할 위험도 존재한다. 언론은 이 양면을 모두 직시하면서, “왜 남보다 앞서나”는 식의 단편적 비난이 아닌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 제시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번 COP30 보도에 대한 비평을 종합하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을 강조해야 할지 언론의 역할을 재고하게 된다. 화석연료 감축에 대한 합의 실패와 같은 사안에서 언론은 국제사회 공동의 책무를 묻는 동시에, 한 국가의 정책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장기적 기후 위험과 단기적 경제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시선이 필요하다. 기후 위기 앞에서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만큼, 언론이 위기의 심각성과 대응의 시급성을 정확히 전하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언론의 이런 노력은 대중과 정책 결정자들의 인식을 성숙시키고, ‘지구를 지킬 마지막 기회’를 실질적 행동으로 연결하는 밑거름이 될 것

이다. 각 언론 보도의 촘촘한 비교를 통해 드러났듯이 기후 위기에 대해 비평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 검증을 넘어 사회적 맥락과 가치판단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COP30을 다룬 여러 시각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일은 곧 우리의 대응 방향을 성찰하는 계기가 된다. 빈손으로 끝난 국제회의와 엇갈린 언론의 목소리 속에서도,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지혜로운 해법과 폭넓은 공감대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언론이 앞으로 감시자이자 안내자로서 책임 있는 보도를 이어가길 기대한다.

* 배*휘

1. 뉴스 제목

반도체 도시 용인, 환경도 챙긴다...이상일 시장 “사람·자연 공존”

2. 링크

<https://www.munhwa.com/article/11545761?ref=naver>

3. 이에 대한 비평

기사를 읽고,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월든'에서 추구했던 삶의 본질이 현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변용되고 있는지 고찰할 수 있었다. 소로가 월든 호숫가로 들어간 이유는 문명에 대한 비판이자, 자연 속에서 의식적이고 단순한 삶을 영위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불필요한 물질적 쳇바퀴에서 벗어나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고자 했다. 하지만 이 기사가 조명하는 '월든'은 그 이름과는 정반대의 현실을 상징한다. 한때 거대한 '쓰레기 산'이었던 난지도 위에 '월든'이 세워졌다는 사실 자체가 현대 문명의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더욱이 이 '월든'은 자연의 재료가 아닌, 대량 소비 사회의 잔재인 플라스틱 폐기물로 구축되었다. 이는 소로가 경계했던 물질주의와 과잉 소비가 낳은 필연적 결과물이다. 소로는 "간소하게, 간소하게 살라"고 외쳤지만, 기사 속 '플라스틱 숲'은 간소함이 아닌 과잉이 남긴 상흔 위에 서 있다.

기사는 '월든'이라는 상징이 어떻게 환경 문제와 결부되어 예술로 표현되는지 보여주지만, '월든'의 독자로서 나는 이것이 진정한 공존인지, 아니면 자연의 자리에 플라스틱을 세워둔 '조용한 절망'의 또 다른 형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소로가 이 광경을 보았다면, "호수 대신 플라스틱 숲"을 보며 우리가 여전히 삶의 본질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통렬하게 비판했을 것이다. 결국 이 기사는 현대 사회가 '월든'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상을 가장 역설적인 방식으로 전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느낄 수 있었다. 진정한 자연과의 공존은 이러한 상징적 조형물이 아닌, 소로가 강조했던 삶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 김*현

1. 뉴스 제목

[빙하의눈물③] 20년 전보다 5배 빠르다...예측 뛰어넘은 해빙 속도

2. 링크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33257_36199.html

3. 이에 대한 비평

이 기사는 북극 빙하 현장을 통해 기후 위기의 전 지구적으로 미치는 과학적, 구조적 영향을 보여준다. 기자가 그린란드 일루리셋, 사르카디움 빙하까지 직접 이동하는 과정과 빙하의 모습을 상세히 보여주며, 시청자에게 멀게만 느껴졌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환기한다. 또한 “20년 전보다 해빙 속도가 5배 빨라졌다”라는 연구 결과를 제시해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보도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있다. 극지

연구소 전문가 인터뷰로 신뢰도를 더하며 기후위기가 단순 자연현상이 아니라 사회, 경제 구조의 결과로 발생했다는 사실 알렸다. 국내의 환경보도와 달리 과장이나 공포를 조장하지 않고 과학·구조·책임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며 정리했으며, 기후위기는 전 지구가 서로 연결된 문제임을 짚었다는 점에서 우수한 보도라고 할 수 있다.

활동 자료

북클럽 팀명		바이라인				
일시/장소	일시	북클럽 기간 내 개인당 1회 제출		장소	비대면	
참여 인원	학과	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학번	2020****	이름	김*아
	학과	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학번	2021****	이름	장*림
	학과	법학과	학번	2021****	이름	정*성
	학과	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학번	2021****	이름	최*수
	학과	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학번	2022****	이름	배*휘
	학과	사회학과	학번	2024****	이름	김*현
	참석인원(명)		6/6		참가자 대표	최*수 (서명)
도서	도서명	씻밥일지			저자	전현우
	출판사	문학동네	출판연도	2022.08.23	번역자	
오늘의 북클럽 주제		삶: 노동				
활동 내용 & 방법						
<p>1. 활동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리터러시 활동 <p>2.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 중 '노동'에 관련된 것을 찾아 비평문 작성. 						
활동 결과						
<p>* 최*수 (참가자대표)</p> <p>1. 뉴스 제목</p> <p>'건폭'이 된 아버지와 아들...그들의 이름을 되찾을 방법은?</p> <p>2. 링크</p> <p>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37195</p> <p>3. 이에 대한 비평</p> <p>세상에서 한 존재의 의의를 왜곡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 바로 이름을 뺀 것이다. 건설노동자라는 엄연한 명칭을 가졌어야 할 사람들이 공권력에 의해 건설 폭력배로 낙인찍혔다.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절하하고 그들의 활동을 변질시켰다. 이는 엄연히 국가가 개인들을 상대로 행한 폭력이다.</p> <p>집을 나선 후 보이는 가로등과 자동차, 버스, 횡단보도, 건물, 우리가 보는 모든 구조물에는 육체노동자의 헌신이 담겨 있다. 이런 헌신을 무시한 채로 단순히 그들이 육체노동밖에 할 수 없는 학력을 가졌다고 비하하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사회는 가장 기초적인 곳에서부터 차례대로 무너질 것이다.</p> <p>경향일보의 '조작된 건폭' 기획 보도는 숭고한 노동의 가치를 희생하고, 잃어버린 그들의 원래 이름을 되찾아주고자 하는 좋은 보도다. 특히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기자가 직접 듣는 과정에서, 건설 노동자들은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됐다”며 화답하기도 했다. 탁상공론에서</p>						

벌어진 왜곡이라는 비극을, 노동 현장에서 채집한 진실로서 되돌려놓으려는 경향일보의 보도는 끝나지 않았다.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건설 노동자들은 노가다꾼이라는 멸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건설 노동자가 그냥 건설 노동자로 불릴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의 보도가 멈추지 않길 바란다.

* 김*아

1. 뉴스 제목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에 대한 보도, 이를 접한 후 생각한 앞으로의 방향성

2. 링크

자체적 논평이므로 없음.

3. 이에 대한 비평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여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지속되는 논란은 이 법이 가진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여전히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과연 중처법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법률인지 아니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률인지 논란이 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CEO를 감옥에 보내는 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법의 진정한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사고 예방'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논란을 잠재우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는 추상적인 의무 조항을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매뉴얼로 세분화해야 한다. 기업이 무엇을 준수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 때, 예측 가능한 경영과 실질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처벌 위주의 접근보다 안전 설비 투자 지원, 컨설팅 제공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능력이 없어 못 하는 것과 알면서 안 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노동자의 희생 위에 경제 성장을 쌓아 올리 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 장*림

1. 뉴스 제목

"노사갈등 기름 부었다"…노란봉투법 이후 번지는 파업 릴레이

2. 링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78726642296512&mediaCodeNo=257&OutLnkChk=Y>

3. 이에 대한 비평

언론의 언어는 사회의 인식을 조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데일리 기사의 헤드라인인 "노사갈등에 기름 부었다"라는 표현은 매우 악의적으로 다가왔다. 이 기사는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화재를 키우는 인화 물질인 '기름'에 비유하고, 노동자들의 파업을 사회가 꺼야 할 '불'로 규정한다. 과연 갈등을 키운 것은 법인가, 아니면 법 뒤에 숨어 노동자의 생존을 외면해 온 현실인가.

이 기사는 인과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기자는 "노란봉투법 이후 파업의 전운이 감지된다"며 마치 법 때문에 없던 갈등이 생겨난 것처럼 호도한다. 그러나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을 고소하고,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선 것은 이 법이 생겨서가 아니다. 싹발일지의 저자가 증언했듯, 진짜 사장인 원청이 하청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위험의 외주화'와 '권한의 독점'이 수십 년간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은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억눌려왔던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비로소 터져 나올 수 있게 만든 '최소한의 통로'다. 기사는 이를 '갈등 증폭'이라 부르지만, 법적 관점에서는 '권리 구제의 정상화'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기사는 '경영상 판단'이라는 모호한 방패 뒤에 숨어 노동권을 부정한다. 기사는 HD현대의 계열사 합병이나 한국GM의 부평공장 유희부지 매각 등을 언급하며, 노조가 "경영상 판단의 문제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적으로 서술한다. 이는 노동을 오직 비용으로만, 노동자를 부품으로만 바라보는 전형적인 경영계의 시각이다. 노동자에게 합병과 공장 폐쇄는 단순한 경영 전략이 아니라, 당장 내일의 밥줄이 끊기느냐 마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다. 자신의 고용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월권'으로 취급하는 언론의 태도는, 노동자를 경영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만 머물게 하려는 낡은 사고방식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은 '공포 마케팅'을 통한 본질 흐리기다. 기사는 "미국의 관세 인상", "저성장", "전기차 캐즘" 등 거시경제의 악재들을 나열하며, 파업이 경제 위기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공포를 조장한다. "하루 평균 1500대의 생산 차질"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파업의 손해를 강조하지만, 정작 그 공장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이 겪는 저임금과 고용 불안이라는 '삶의 손해'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는다. 경제 위기의 책임을 가장 약한 고리인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파업을 '이기적인 행위'로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첫밥일지 속 노동자들은 묻는다. "우리는 왜 유명 취급을 받는가." 이 기사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보여준다. 언론이 그들을 권리를 가진 시민이 아니라, 경제 성장을 위해 조용히 돌아가야 할 기계 부품으로만 여기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은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다. 그동안 꽉 막혀 있던 하청 노동자들의 숨통을 틔운 것이다. 언론이 해야 할 일은 불길을 잡겠다고 노동자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들이 머리띠를 매고 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발화점'인 구조적 모순을 직시하는 것이다.

* 정*성

1. 뉴스 제목

산재를 둘러싼 언론의 보도 행태 (산재 보도 종합평가)

2. 링크

종합평가이므로 따로 링크 없음.

3. 이에 대한 비평

올해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둘러싸고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과 이를 다루는 언론 보도 사이에 뚜렷한 시각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매일 2명 이상이 일하다 죽는다는 통계에 충격을 표하면서 산업재해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비유하는 등 강한 어조로 기업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직보하라"고 지시하고, 산재 다발 기업에 대해 면허 취소·공공 입찰 제한 등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해마다 800여 명에 이르는 산재 사고 사망자를 줄이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언론들은 이러한 정부 대응에 각기 다른 평가와 해석을 내놓았다. 보수 성향 언론은 대통령의 적극적인 개입에 우려를 표하며 과도한 처벌과 집중 대응의 부작용을 지적했고, 진보 성향 언론은 산재의 구조적 원인을 짚으며 근본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보수 성향의 언론들은 이 대통령의 산재 대응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조선일보 사설은 "지금 산재 말고도 시급한 국가 현안 많지 않나"라는 도발적인 제목을 달아, 대통령이 산재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는 데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사설은 대통령의 분노 표출식 대응이 잇따르면 과잉 입법이나 산업 위축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안보나 경제와 같은 더 시급한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산재 문제에 대한 국가 최고지도자의 관심이 지나치다는 시각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두 명 이상의 노동자가 하루하루 일터에서 죽어가는 현실을 간과한 채, 경제 성장 등 거시 현안을 앞세워 문제의 심각성을 축소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조선일보조차 "매일 2명 이상 산재 사고로 사망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작 해결책으로는 안전 관리나 교육 강화와 같은 원론적 대책만 언급할 뿐 기업 책임을 강하게 묻는 접근에는 선을 그었다. 이는 산재를 구조적 문제보다는 현장 관리의 문제로만 좁혀보는

시각으로, 노동자 생명의 가치보다 산업 효율을 우선시하는 태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사설은 대통령이 분노하면 일시적으로 사고가 줄어드는 듯 보일 수 있지만 결국 현장 안전관리 강화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산재 문제의 정치·경제적 우선순위를 낮게 두는 보도 태도는 국민 생명 보호를 국가의 최우선 책무로 보는 관점과 상충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언론은 정부의 강경 제재 일변도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그 근거로 산재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들고 있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기업 문책 당연하나 구조적 요인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 의지 자체는 공감하면서도, 징벌적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산업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초강경 대책 발표 이후 한 건설사에서 대표와 임원 80여 명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공사 현장을 전면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면서, “기업을 닦달하는 것만으로 문제를 풀 수는 없다”고 논평했다. 중앙일보와 세계일보 등은 잇따라 산재 다발의 구조적 원인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 ▲최저가 입찰에 따른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 ▲외국인 노동자 증가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 ▲현장 노동자 고령화 등을 지목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처벌 강도만 높여서는 산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세계일보는 국내 건설업의 산재 사망률이 유독 높고, 하청 노동자를 기계 부품처럼 취급하는 전근대적 관행까지 남아 있어 기업의 노력 없이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제도 개선과 기업의 안전 투자, 노동자의 수칙 준수를 모두 병행해야 산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처벌 강도만 높인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라는 세계일보 사설의 문구에 잘 드러난다. 이러한 논지는 일면 타당하다. 실제 산재는 개별 현장의 실수나 운에만 좌우되지 않고, 산업 구조 전반의 문제가 누적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언론이 지적한 대로 원청과 하청 구조 속 하청 노동자의 안전 문제나, 저가 수주로 인한 만성적 안전 투자 부족, 그리고 의사소통 미흡이나 고령화로 인한 위험 증대 등은 모두 통계와 사례로 입증되는 현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말하면서 기업 처벌 완화를 정당화하는 뉘앙스를 함께 풍긴다는 점이다. 중앙일보는 “징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강력한 처벌 일변도가 오히려 산재 은폐율을 높이고 기업의 현장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 우려했다. 서울신문 역시 사설에서 정부 대책에 대해 “극단적 처벌로 수위만 높여서 해결될 일인지 백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평했다. 게다가 산재 원인 분석 없이 처벌 강화만 내세운 점을 비판하며, 강력 제재 예고에 “건설업계는 새파랗게 질려 있다”, “산업계가 패닉에 빠졌다”는 표현까지 동원해 기업 현장의 불안감을 전했다. 더 나아가 “노동권 일방주의”, “일자리가 쪼그라든다”는 등의 표현으로, 정부와 여당의 산재 대책과 노동 정책들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켜 고용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태도는 구조적 원인 진단과 기업 책임 희석 사이의 미묘한 경계에서 있다. 분명 산재 문제 해결에 있어 처벌은 수단일 뿐 궁극적 목적이 아니다. 안전 투자를 늘리고 현장 문화를 바꾸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하지만 일부 언론들은 마치 “기업을 너무 몰아붙이면 안 된다”는 식의 메시지가 강하게 깔려 있어, 자칫 책임의 추를 기업보다 노동자나 정부 규제 탓으로 돌리는 인상을 준다. 실제 서울신문은 산재 대책과 함께 주 4.5일제, 정년 연장,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같은 정책들로 기업이 “주눅이 들었다”며 노동권 강화 흐름 자체를 부담 요인으로 묘사했다. 산재 대책 논의에 엉뚱하게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불만을 끌어들이며 문제의 본질을 분산시키는 모습이다. 구조적 요인을 말하면서도 정작 그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규제나 개혁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이중적 태도로 비칠 수 있다. 이러한 보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보다는 경제적 부담을 더 걱정한다는 비판적 시각을 초래한다.

이에 반해 경향신문을 비롯한 진보 성향의 언론들은 산재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직시하면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주문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다.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의 산재 대응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동시에 “위험을 전가하는 고용 구조를 바로잡아 ‘죽음의 외주화’를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기관부터 출선수범해 하청에 위험을 떠넘기는 관행을 없애지 않으면 “땀질식 처방의 한계를 넘어서 수 없다”고 지적한 대목이 눈에 띈다. 실제로 최근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참사를 계기로 공기업들에서 산재 피해자의 85%가 하청 소속임이 재확인되자, 경향신문은 “후진국형 산재를 더는 방지해선 안 된다”며 산재 청문회 개최와 같은 강력 대응을 요구했다. 나아가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법부도 솜방망이 처벌을 탈피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근본 대책으로 ‘죽음의 외주화’ 철폐와 장시간 저임금 노동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주장은 산재 문제를 사회 구조와 기업 문화의 문제로 인식하고, 표면적인 수치 감소보다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을 중시하는 태도라 평가된다.

또 다른 눈에 띄는 보도는 동아일보의 산재 관련 사설이다. 동아일보는 최근 배달 플랫폼 업계가 산재 다발

1, 2위를 기록한 것을 다뤘다. 또한 “배달 오토바이들이 도로 위 시한폭탄이 되는 상황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라이더의 과속이나 신호위반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적정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원인이라고 짚었다. 실제 플랫폼 노동의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건당 배달료가 낮다 보니 폭염이나 폭우에도 무리하게 배달할 수밖에 없고, 플랫폼의 경쟁 유도 시스템이 위험 운전을 부추긴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리고 해결책으로 정부의 ‘최소 보수제’ 도입 등 임금 구조 개선이나 플랫폼 차원의 안전 교육 강화와 인센티브 제도 도입, 산재 다발 기업에 대한 부담금 증액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는 산재 문제를 개별 노동자의 부주의가 아닌 제도와 구조의 문제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 해법 역시 구조 개선에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다.

대개 진보 성향의 언론들은 산재 문제를 노동 환경 전반의 병폐로 인식하면서 구조 개혁과 예방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런 시각은 앞서 보수 성향의 언론들이 구조적 원인을 거론하면서도 ‘기업 때리기’에 방점을 찍었다고 우려한 것과는 온도 차이가 있다. 『씻밥일지』의 저자 천현우 씨도 한 인터뷰에서 “산재의 상당 부분은 당국과 기업의 의지가 있으면 막을 수 있다”며, 실제 삼성물산이 작업중지권을 보장하자 산재가 줄어든 사례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는 기업의 결단과 문화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동시에 그는 “근본적으로 ‘죽음의 외주화’나 장시간 저임금 등 구조적 요인을 함께 살펴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은 경향신문 등 진보 언론의 논조와 정확히 맥을 같이한다. 산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 기업 문화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토론의 주제가 아니라 당연한 상식이 되어야 한다. 지금도 하루 두 명씩 생명을 잃는 이 비극을 끝내기 위해서는, 산재를 개인이나 기업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앞서 살펴본 언론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설령 논조의 차이는 있어도 단편적 대응만으로는 산재를 줄일 수 없다는 점에는 대체로 의견이 모인다. 처벌과 규제는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근본 대책이다. 하청 노동자의 희생을 당연시해 온 산업 구조와 돈보다 생명을 경시하는 기업 문화, 위험을 감수하도록 내모는 노동 환경을 바꾸지 않고서는 산재 감소는 일시적 통계 놀음에 그칠 것이다. 최근 정부의 강경한 메시지와 여당의 입법 추진은 산재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는 긍정적 신호다. 그러나 세계일보가 지적했듯, 만일 법안대로 10대 건설사 대부분이 순차적으로 문을 닫아야 할 극단적인 상황을 초래한다면 이는 현실성이 없는 대책일 것이다. 노동자의 생명 보호와 산업 지속 가능성은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길을 찾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이미 산재를 획기적으로 줄인 국가들은 처벌 강화와 구조 개선을 병행했다. 우리도 이 두 가지 축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언론은 경제 논리로 안전 규제를 흘려버리려는 기업 논리를 경계하는 한편,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대책도 비판하며 건설적 여론 형성에 힘써야 한다. 씻밥일지의 저자는 책에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면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니 순진했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그는 글쓰기와 목소리 내기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수많은 이들이 그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산재 문제의 해결도 한 걸음 한 걸음의 구조적 변화에서 시작될 것이다.

‘죽음의 행렬’을 끊어내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이제는 어느 한쪽의 “때리기”나 “일방주의”라는 프레임을 넘어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사회 전체가 책임지고 나서야 할 때다. 산재로 가족을 잃은 유족의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둘 거냐!”는 절규에 정부와 기업과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응답해야 한다.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답은 없다. 구조를 바꿀 때 비로소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는 당연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실현될 것이다.

* 배*취

1. 뉴스 제목

택배 노동자들 "속도보다 생명...새벽배송 규제해야"

2. 링크

3. 이에 대한 비평

싹밥일지라는 책을 읽고나서 처절하고 황량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노동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주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이와 더불어 한국 사회가 조장하는 노동의 개념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대중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도 느끼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접하게 된 본 기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배송 업무에 매진하며 365일 살인적인 속도 경쟁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택배를 주문하는 입장에서는 세상 편리하고 당연한 존재일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그 택배를 배송하는 건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노동자와 고객 두 입장을 모두 고려한 체제는 결코 아닐 것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새벽에도 배송하는 시스템이 사라졌을 때 발생하는 불편이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동자의 인권을 생각하고 고려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아직까지도 명목상 존재하는 노동자 보호 규제 및 환경, 위해주는 척 겉으로 보여지는 결과만에 집중하는 기업과 사회의 태도로 인해 쉽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느낄 수 있었다. 한 사람의 소중한 목숨을 바쳐 생사를 오가는 와중에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다는 현실이 과연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늘 그랬듯이 전국이 들썩일만한 큰 사건이 발생해야 비로소 심각성을 느끼고 뒤늦게 수습하는 한국 사회의 특징이 이처럼 절망적인 현실을 보다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기사였다.

* 김*현

1. 뉴스 제목

[단독-런베뮤 과로사 의혹] '주 80시간 초장근로' 스물여섯 청년 숨지다

2. 링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869>

3. 이에 대한 비평

이 기사는 26세 청년이 주 80시간의 초장시간 노동 끝에 사망한 사건을 최초 보도하였다. 은폐될 가능성이 있던 노동자의 죽음을 보도를 통해 공론화시킨 것이다. 근로계약서, 지문인식 기록, 동료 증언 등 구체적인 증거를 토대로 회사의 부당한 근로 조건을 폭로했으며, 쪼개기 계약 퇴직금 지급, 산재를 은폐하려 시도한 정황과 초장시간 노동 등 착취 정황을 낱알이 파헤쳤다. 보도를 통해 사건은 공론화되었으며, 이는 국정감사, 고용노동부 조사와 같은 실질적인 사회 변화를 끌어낼 수 있었다. 또한 대기업이 아닌 노동이 있는 곳 어디서나 착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며 사회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활동 자료

복클럽 팀명	바이라인					
일시/장소	일시	복클럽 기간 내 개인당 1회 제출		장소	비대면	
참여 인원	학과	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학번	2020****	이름	김*아
	학과	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학번	2021****	이름	장*림
	학과	법학과	학번	2021****	이름	정*성
	학과	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학번	2021****	이름	최*수
	학과	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학번	2022****	이름	배*휘
	학과	사회학과	학번	2024****	이름	김*현
	참석인원(명)		6/6		참가자 대표	최*수 (서명)
도서	도서명	자몽살구클럽			저자	한로로
	출판사	어센틱	출판연도	2025.07.25	번역자	
오늘의 복클럽 주제		삶: 생명				
활동 내용 & 방법						
<p>1. 활동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리터러시 활동 <p>2.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 중 '자살'에 관련된 것을 찾아 비평문 작성. 						
활동 결과						
<p>* 최*수 (참가자대표)</p> <p>1. 뉴스 제목</p> <p>[탐사보도] '누구나 불안해', 당연시되며 사라지는 청년의 목소리</p> <p>2. 링크</p> <p>http://www.kgunews.com/news/view.php?idx=5700</p> <p>3. 이에 대한 비평</p> <p>청년들의 불안과 우울감 호소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반면, 죽음에 대한 반응은 역으로 가벼워 지고 있다. “다 죽자”나 “자살해야겠다” 같은 말들이 실생활에서 농담으로 자주 쓰이는 현실을 보면 죽음에 대한 인식은 가벼워지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청년들은 점점 더 숨으려 하고 있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에서 자살률은 증가하고 있고, 국가는 대책을 내놓으려 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p> <p>대학 언론이 나서는 것이 하나의 방도가 될 수 있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언론사는 청년들의 배움의 터전인 대학의 언론사이기 때문이다. 경기대뉴스의 청년 우울 탐사보도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통한 논리 구성과 함께 실제로 자살 충동까지 느꼈던 4명의 청년을 섭외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때로는 문제를 드러내려는 시도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보도해 줄 사람이 있다면, 혼자가 아니란 사실이 위안이 되고 그들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게끔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어찌</p>						

면 지금 언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거시적인 자살률 데이터를 가지고 사회 전체를 평가하려는 오만한 생각 보다는 눈앞의 우울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들음으로써 주변 환경을 직시하려는 굳은 태도가 아닐까.

* 김*아

1. 뉴스 제목

강세리, 이경희. (2025). 청소년과 청년의 자살 시도 및 자살의 특성과 영향 요인: 퇴원손상심층조사자료를 활용하여.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26(3), 27-47.

2. 링크

논문이므로 링크 없음.

3. 이에 대한 비평

이번 북클럽으로 청소년의 자살 관련 논문을 찾아보았다. 청소년의 자살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감정조절 능력 부족, 충동성, 대인관계 갈등, 학업 스트레스 등의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학업 부담, 부모와의 갈등, 학교폭력 등의 경험이 자살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 집단과의 소속감,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자살 예방에 중요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 또 한 국외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자살은 주관적 우울감, 삶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자살 시도 및 자살 사고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조기 개입 및 임상·심리적 지원이 청소년 자살 예방에 핵심이라 하였다. 학교라는 집단이 생활의 전부인 시기는 학교에서 바라는 모범생이 되는 것이 편하다.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께 예의 바르며,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매일같이 가야 하는 학교가 괴로워진다. 이 부분을 청소년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자살이 개인만의 문제라고 보는 시각은 이제 사라졌다.

오늘 찾아본 논문처럼 집단은 이제 개인의 자살에 대해 분석하기 시작했다. 자살이 개인의 문제로 간주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자살률이 낮아지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파파게노 효과 때문에 보도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고립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문제이다.

* 장*림

1. 뉴스 제목

한국 언론의 자살 보도 행태 비평

2. 링크

종합비평이므로 따로 링크 없음.

3. 이에 대한 비평

클릭 수와 맞바꾼 보도 윤리

한국기자협회는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통해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명인의 비보가 전해질 때마다 이 원칙은 무참히 깨진다. 언론은 고인이 생전 겪었던 갈등을 자극적으로 편집해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내보낸다. 심지어 구체적인 사망 경위까지 속보 경쟁의 도구로 삼는다. 이는 독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트래픽을 올리려는 '장사'에 불과하다. 이러한 보도는 베르테르 효과를 유발한다.

'왜'를 묻지 않는 게으른 보도

더 큰 문제는 자살의 원인을 납작하게 다루는 태도다. 대부분의 기사는 성적 비관, 생활고, 우울증 등 개인적인 사유를 자살의 원인으로 단정 짓고 사건을 종결한다. <자몽살구클럽>에서 소하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했던 이면에는 가정폭력과 사회적 방임이라는 거대한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언론은 이러한 사회 구조적 맥락을 소거한 채, 오로지 사건 그 자체에만 집중한다. 죽음의 사회적 원인을 분석하지 않는 보도는 남겨진 사회 구성원들에게 아무런 교훈도, 대안도 주지 못한다. 이는 언론의 직무 유기라고 생각한다.

'베르테르'를 넘어 '파파게노'로

언론은 '사회적 흥기'가 될 수도, '구조의 빔줄'이 될 수도 있다. 이제 한국 언론은 '베르테르 효과'를 양산하는 중계식 보도를 멈추고, 자살 예방 효과를 뜻하는 '파파게노 효과'를 지향해야 한다. 죽음의 과정을 전시하는 대신, 그들이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사회적 타살의 흔적을 추적해야 한다. 또한 기사 말미에 기계적으로 상담 번호를 붙이는 면피성 태도를 버리고, 위기에 처한 이들이 실질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알리는 데 지면을 할애해야 한다. 죽고 싶은 아이들이 모여 살고 싶다고 외칠 때, 그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사회에 활성기를 대어주는 것.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 언론이 나아가야 할 기자의 책무다.

* 정*성

1. 뉴스 제목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의 문제점과 원인에 대한 비판적 분석

2. 링크

자체분석이므로 따로 링크 없음.

3. 이에 대한 비평

I. 서론: 전략의 개요와 비판적 검토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29.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동시에 심각한 사회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자살률이 다시 상승하고 10대·20대 청년층의 자살률도 급증하여(10대 자살률 75.6%↑, 2014~2023)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5년 9월 12일, 국무총리 주재하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수립하여 자살률의 획기적 감소를 목표로 하는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번 전략은 2024년 자살률 28.3명을 2029년 19.4명, 나아가 2034년 17.0명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고위험군 집중 대응 ▲취약계층 지원기관 연계 ▲범부처 위기 요인 선제 대응 ▲지자체와 현장 대응 체계 확립 ▲생명 보호 정책 강화 등 5대 분야에 걸쳐 18개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목표의 타당성과 정책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전략의 핵심 문제점을 일곱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구조적, 제도적 원인을 짚어보고자 한다.

II. 정책 구조가 갖는 문제점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의 거버넌스 구조에는 범부처 참여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가 강조되었지만, 과거 추진 체계의 한계를 충분히 극복했는지 의문이다. 정부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산하에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으나, 과거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연 1회 수준 개최에 그쳐 실효적 운영이 미흡했던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본부 설치만으로 범부처 협력이 보장되기 어렵다. 이는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정책을 추진했을 뿐 이를 조율하고 실효성을 담보할 중심 기구가 없었던 것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지난 20여 년간 자살 예방 정책이 실패한 주요 원인으로 거버넌스 부재와 자살 예방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인

력 부족을 지적해 왔으며,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고 이끌어갈 상시적인 협의체가 없다는 문제는 2015년부터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재의 보건복지부 중심 수직적 구조는 교육과 복지, 노동 분야 등 다른 조직과의 연계가 어렵고, 각 부처는 필요할 때마다 협의하는 수동적 방식에 머물러 있다.

또한 이번 대책은 여러 중앙 부처와 지자체의 역할을 망라한 방대한 계획이지만, 기존 정책을 단순하게 재배열한 수준이다. 실제로 과거 자살 예방 기본계획들에서 이미 언급된 대책들이 이번 전략에서도 반복되고 있으며, 혁신적인 새로운 방안이 부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중복과 나열식 접근의 원인으로는 자살 문제가 복합적이라 여러 부처의 영역이 걸쳐있음에도, 정부가 종합적인 청사진보다는 각 부처의 기존 사업을 모아서 전략을 꾸리는 방식에 치중한 구조적 한계를 들 수 있다. 정부의 전략은 관계 부처가 적극 대응 및 개선하도록 하고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집행력 확보 방안이나 평가 체계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2024년 시도 자살 예방 시행계획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국가정책을 반영한 사업 추진은 우수하나 지역 여건에 맞는 자살 예방 사업은 저조하게 평가되었고,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 사회 자살 예방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 결과 정책 간 중복 투자나 자원 분산이 발생하고, 정작 필요한 핵심 개혁은 희석될 우려가 있다. 결국 전략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단순한 부처별 대책 나열이 아니라 부처 간 역할 정립과 통합 실행력 제고가 필수적인데, 현재의 조직과 구조로는 과거의 시행착오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III. 자살 원인에 대한 근본적 접근의 한계

그동안의 자살 예방 정책은 긴급 조치와 사후 심리 치료에 치중하고, 정작 자살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도 현행 대응 체계의 문제로 근본적인 자살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고위험군 긴급조치와 심리 치료 중심으로만 대응해 왔다고 진단한다. 예컨대 경제적 파산이나 실업률 문제, 사회적 고립과 같은 구조적 요인들이 자살 위험을 높이는 배경인데, 지금까지는 이러한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보다는 자살 시도 후 응급처치나 상담 제공에 그친 측면이 강했다.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원인 진단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과학적 통계와 연구에 기반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번 전략에서도 정작 이러한 원인 규명 노력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불투명하다. 물론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각 부처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그동안 해소되지 못한 구조적 위기 유발 요인을 발굴하겠다고 밝히면서 과도한 경쟁이나 과로 사회, 양극화와 취업난, 악성 댓글 등을 사회 구조적 요인의 예시로 들었다. 이는 자살의 근원적 요인을 건드리겠다는 취지로 읽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교육이나 고용, 복지 등 광범위한 분야의 개혁을 요구한다. 현실적으로 한두 개 부처의 노력이나 단기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그러나 이번 전략은 구조적 문제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과 진단을 거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기보다는 관련 부처에 있던 기존의 과제를 분산하여 배정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예를 들어 ‘구조적 위기 요인 해소’라는 과제가 관계 부처에 부여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변화로 경쟁적 사회풍토나 취업난을 완화할지 명확한 청사진은 제시되지 않았다.

결국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이해 부족은 이전 정책이 갖는 한계점이었으나, 이번 전략에서도 그 극복 의지는 보이거나 실행 단계에서 여전히 모호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자살 문제가 다면적이라 근본 대책 수립이 복잡한 점, 그리고 각 부처의 이해관계로 인해 구조적 문제 해결이 후 순위로 밀린 행정편의주의적 관행으로 보인다.

IV. 재정과 인력 편성의 비현실성과 한계

재정과 인력 지원의 부족도 자살 예방 정책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국 광역 및 기초 자살 예방 센터는 25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센터당 평균 인력이 3.6명에 불과하며, 전문적 사례 관리 업무에 약 10명 정도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처럼 현장 인력 부족으로 인해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충분한 사례 관리와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 결과 현재는 역력이 되는 만큼 손이 닿는 선에서 제한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정작 사업 확대가 시급함에도 예산이나 인력 부족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자체 평가다. 실제 효과가 입증된 유족 원스톱 지원 서비스의 경우, 해당 지원을 받은 유가족의 자살 생각 비율이 1년 후 0%로 떨어지는 성과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 12개 시도에서만 시행되고 있어 전국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는 예산과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성공적인 자살 예방 프로그램조차 널리 실행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 준다. 이번 전략 발표와 함께 정부는 자살 예방 관련 예산을 올해 562억 원에서 내년 708억 원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약 26% 증액된 규모이지만, 전문가들은 “현 대책에서 체감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며 향후 예산 대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즉, 증액된 예산으로는 목표로 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망 구축이나 센터 인력 대폭 확충 등의 구상을 실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중앙정부가 예산을 늘리겠다고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 충원과 교육, 그리고 시설 확대에 얼마나 투입될지는 미지수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편차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과거에도 자살 예방 예산은 전체 복지 예산 대비 미미한 수준이었고, 인력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많아 지속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예산과 인력의 현실적인 애로 사항은 자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정부의 의지와 우선순위에서 기인한 면이 크다. 따라서 그동안 자살 예방에 투입되는 재원을 대폭 늘릴 정치적 결단이 부족했고, 해당 분야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체계도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못한 구조적 원인이 깔려 있다.

V. 지역 맞춤형 대응과 실현 가능성

이번 전략에서는 ‘지역 맞춤형 예방 및 현장 중심 대응 전략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는 지역별 자살 유발 요인이 다르므로 각 지자체가 자체 특성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 수준에서 이런 대응이 가능할지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우선 앞서 언급한 대로 지역 자살 예방 센터의 인력과 자원 부족이 큰 걸림돌이다. 한 설문문에 따르면, 센터 종사자들은 대응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려면 현재 인력의 약 3배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는데, 이러한 인력 확충 없이 지역 주도의 개입을 기대하기 어렵다. 전략에는 ‘지자체 리더십 강화’, ‘집행조직 확충’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중앙정부의 지침 수준일 뿐 실제 각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전담 조직과 인력을 얼마나 확보할지는 미지수다.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 및 산간 지역의 경우 추가 인력 채용이나 사업 확장이 쉽지 않을 수 있으며, 따라서 지역 간 자살 예방 역량 격차가 크게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전략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현장과 중앙정부 간의 조율 문제도 우려된다. 현재도 응급실이나 주민센터, 경찰과 소방 등 기관 간에 연계가 미흡하여 고위험군 발굴 과정에 공백이 있다는 평가가 있다. 예를 들어 복지 부서와 일선 의료기관, 고용 센터와 교육 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가 충분하지 않아 위기 징후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 주도로 여러 기관을 엮어내는 거버넌스 역량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지자체에 자살 예방과 관련된 상당한 업무를 맡김으로써 지자체 공무원이 과연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특히 자살 예방 업무는 지자체장이나 공무원 입장에서 우선순위가 낮게 취급될 우려도 있다. 일본의 경우 이미 2007년 종합대책 수립 시에 각 지자체에 자살 예방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중앙정부가 ‘지역 자살 대책 긴급 강화 기금’을 조성하여 지방정부의 대응 능력을 높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제야 지자체 주도의 역할을 언급한 수준으로, 전담 인력 배치나 구체적인 재정 지원 방안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지역 맞춤형 대책은 일시적인 구호에 그칠 수 있다. 이러한 현장 실행력 문제가 나타나는 원인은 그간 중앙정부 정책이 지방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Top-down 식으로 이루어진 점, 그리고 지역 사회의 복지 시스템과 보건 인프라의 취약함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의 의견 수렴과 역량 강화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 단계에서는 계획 대비 실현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VI. 해외 사례와 비교한 전략적 차이점과 대안

이번 전략을 해외 선진 사례와 비교하면 몇 가지 전략적 차이와 미흡한 부분이 엿보인다. 먼저 과학적 근거와 연구 투자의 규모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핀란드는 1986년 국가 자살 예방 프로젝트를 가동하면서 5만 명에 달하는 조사 인력을 투입해 자살 사망자 1,337명 전 원에 대한 심리 부검을 시행했다. 이 대규모 조사로 우울증과 자살 간 높은 관련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우울증 조기 식별과 치료 연계를 강화한 결과 1990년에 자살률 30.3명에서 2010년 17.6명, 2021년 13.2명으로 대폭 감소시켰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살 원인에 대한 대규모 실증 연구나 자료 축적이 부족하고, 이번 전략에서도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이나 심리 부검 확대 등의 언급은 있지만 핀란드처럼 과감한 조사 연구 투자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정부의 거버넌스 역량과 추진력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일본은 총리 직속의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하여 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부여하고, 자살 예방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격상했다. 이와 더불어 모든 지자체에 자살

예방 전담 공무원을 두고 중앙 차원의 기금 지원을 통해 지역 대책을 뒷받침함으로써, 1999년 자살률 25.5명을 2021년 15.6명으로 낮출 수 있었다. 우리 정부도 이번에 국무총리 산하에 범정부 대책본부 설치를 예고했지만, 과거에도 유사한 기구가 존재했음에도 실질적인 기능이 미흡했던 전례가 있어 일본만큼의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지는 불투명하다. 또한 일본은 2007년 첫 종합대책 이후 5년 주기로 대책을 개선하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과제를 발굴했는데, 한국은 과거 계획들이 반복과 단절을 거듭하여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또한, 사회적 연결과 고립 문제 해결 방식의 차이가 나타난다. 영국은 2018년에 세계 최초로 고독 담당 장관을 임명하고 자살 예방 차관직을 신설하는 한편, 2019년 사회적 처방(Social Prescribing) 제도를 도입하여 우울감이나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독서 모임, 미술치료, 자원봉사 등 사회 활동에 연결해 주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80%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고립감이 70% 줄어드는 등의 큰 성과를 내어 자살률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도 이번 전략에서 사회적 연결 끈 강화와 고립과 은둔을 위한 지원을 언급하고 있지만, 영국처럼 제도화된 사회 보장 프로그램이나 전담 부처 신설 등의 혁신적 접근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만연한 1인 가구의 고립이나 은둔형 외톨이 문제 등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 기반의 정신 건강 지원망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독일의 경우 2001년 뉘른베르크에서 시작된 우울증 연합 네트워크(GAAD)를 전국 82개 지역으로 확산시켜 지역별로 의사와 상담사, 자원봉사 간에 게이트키퍼를 연결하고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그 결과 해당 지역들에서 자살 시도율 24%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익명 이메일 상담을 비롯한 학교 교육 프로그램(Youth-Life-Line) 등 민관 협력 모델을 구축하였다.

우리 정부도 이번 전략에서 민관 협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도 정부 주도의 사업이 중심이고 위와 같이 풀뿌리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 사회의 자발적 움직임을 끌어내는 방안은 미흡하다. 민간단체나 지역 공동체와의 파트너십이 강하지 않으면, 독일처럼 지속 가능한 지원망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해외 사례들과 비교할 때 이번 전략이 갖는 가장 취약한 부분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중앙 컨트롤 타워의 실효성에 의문점, 사회적 고립 대응의 부족, 그리고 풀뿌리 지역사회의 지원망 약제로 정리된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정책에 대한 투자 규모와 방식의 차이, 그리고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과 정치적 의지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우리 정부도 해외 선진 사례에서 보듯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수립하고 과감한 재정 지원을 투입하는 한편, 지역 사회의 혁신적 접근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VII. 미흡한 실증적 근거 자료와 목표의 비현실성

한편, 이번 전략에서 정부가 제시한 자살률 17.0명 이하라는 목표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2034년 목표치인 17.0명을 설정한 근거로 OECD 자살률 2위 국가인 리투아니아의 수인 17.1명을 참고했다고 밝혔고, 2029년 목표 19.4명은 연간 자살 사망자 수를 1만 명 이하로 낮추는 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어떤 항목에 얼마를 투자하면 몇 명이 감소할지에 대한 기초 연구가 전혀 없고, 그저 OECD 꼴등만 면하면 된다는 식의 목표 설정”이라고 강하게 지적한다. 실질적으로 자살률 감소를 위해서는 각 정책 수단이 갖는 효과의 크기를 추정하고 그에 따른 목표 수치를 산정해야 하지만, 이번 전략에는 이러한 객관적 시뮬레이션이나 근거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비판은 과거 자살 예방 1~5차 기본계획들도 불명확한 목표치를 내걸었다가 모두 달성에 실패했다는 사례가 방증한다. 예컨대 ‘제4차 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자살률 목표를 17.0명(2022년)으로 설정했으나 실제 2022년 자살률은 26.0명으로 목표를 크게 밑돌았고, ‘제5차 기본계획(2023~2027)’에서도 2027년 18.2명을 목표로 했으나 2024년 기준으로 벌써 29.1명으로 오히려 상승하여 목표선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목표를 10년 후로 설정한 것은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만 있을 뿐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지표 설정의 비현실성은 정책 추진 과정의 동력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 목표가 지나치게 높거나 막연하면 중간 평가에서 성과 부진으로 정책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커질 수 있다. 또한 목표 달성에 집착하는 나머지 통계상 숫자 관리에 급급해지고, 정작 현장에서의 질적인 변화에는 소홀해질 가능성도 있다. 극단적으로는 통계를 조작하려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 예컨대 사망진단서의 사망 원인을 임의로 바꾸거나 통계 산출 방법을 조정해 수치를 낮추는 꿈수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목표 설정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중간 지표를 통해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번 전략은 실증적 지표 체계의 설계가 부족해 보인다. 이는 그간 자살 예방 정책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평가가 부족했던 구조적 측면과 성과를 부각하기 위한 낙관적 숫자를 앞세운 행정 정치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결국 구체적인 근거에 입각하지 않은 목표는 실천을 담보하지 못하며, 향후 계획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 하겠다.

VIII.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접근의 부재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의 배경에는 다양한 사회 구조적 요인들이 자리하고 있다. 극심한 입시와 취업 경쟁, 장시간 노동과 과로 문화, 실패에 대한 낙인과 경제적 양극화,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고립 등 복잡한 구조적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해 개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환경을 만들어왔다. 정부도 이러한 구조적 요인의 존재를 인정하며 과도한 경쟁 구조, 약자와 소수에 대한 안전망 부족, 실패와 낙오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이를 정책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흡하다. 사회 구조를 바꾸는 일은 자살 문제 대응 중에서도 가장 난도가 높은 과제이며, 정권의 임기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 최소한 국가 차원의 자살 예방 전략이라면 이러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 비전과 연계 대책을 제시할 책임이 있는데, 이번 전략에서는 관련 내용이 캠페인성 사업이나 선언적 문구에 머물고 있다는 한계를 보인다. 예를 들어 과도한 경쟁 완화를 위해 교육 제도나 채용 문화의 개선까지 연결되는 방안은 찾기 어렵고, 대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 건강 교육이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미시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 물론 후자의 조치들도 필요하지만, 한국 사회가 갖는 경쟁 사회 전반의 압력을 낮추는 거시적인 개혁 없이 개별적인 접근 방법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 사회적 고립 문제의 경우 고독사 예방이나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이 제시되었으나, 이는 이미 고립된 사람을 찾는 사후 대응 위주에 머물러 있다. 지역 사회의 공동체 회복이나 주민 참여를 통한 예방적 연결망 구축 등 보다 근본적인 접근은 찾아보기 힘들다. 한편, 악성 댓글이나 사이버 따돌림 등 디지털 환경의 유해성도 신중 위험 요인인데, 이에 대해 전략에서는 불법 정보 차단을 강화하는 정도를 언급하는 데 그쳤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로 소극적인 대응에 머문 것으로 보이나, 디지털 시대에 맞는 획기적인 대책은 찾아볼 수 없었다.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접근이 취약한 원인으로는 먼저 이러한 문제들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워 정부 입장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을 들 수 있다. 또한, 구조적 문제 해결은 여러 부처와 민간이 공동으로 나서서 협력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부처 칸막이가 강해 유기적인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회 구조 자체를 건드리는 일은 때로는 정치적 부담을 수반한다. 예컨대 과로 문화를 개선하려면 기업의 노동 시간 단축과 같은 기존의 관행을 바꿔야 하고, 입시 경쟁 완화를 위해서는 사교육 시장을 개혁해야 하는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첨예한 사안들이 대부분이라 쉽게 합의점을 모색하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도 크고 작은 반발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전략은 구조적인 문제를 원론적으로 언급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실행 방안에서는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결국 자살 문제의 근본적인 토양 자체를 바꾸는 노력이 부족하다면 아무리 예방 대책을 늘려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회 구조적 접근의 부재는 이번 전략의 가장 아쉬운 부분 중 하나다.

IX. 결론: 전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은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자살 문제에 대해 범부처 총력 대응을 선언하며 기존 정책의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고위험군 즉각 개입 강화, 범부처 구조적 요인 대응,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조 등은 이전 대책들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가능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전략은 정책 구조가 갖는 문제점과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접근 방법, 자원 투입의 현실성과 해외 사례와 비교한 전략 수준 등 여러 측면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단지 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20여 년간 반복해 온 자살 예방 정책이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 원인에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해야 한다.

앞으로 이번 전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판에서 한 걸음 나아가 실질적인 개선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강력한 거버넌스 역량을 확보하여 정책 이행을 수시로 점검하고 부처 간 조정을 상시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과제별로 명확한 성과 지표와 구체적인 근거를 재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편성해야 한다. 지자체에는 재정 지원과 인력 충원을 통해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민간 분야와 협력하여 합동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살 문제의 뿌리와도 같은 사회적 고립과 과로 사회, 과도한 경쟁 등을 완화하기 위해 해외 사례에서 참고하여 새로운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하거나 관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용기 있는 결단이 절실하

다. 또한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는 행정 정책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현안이 의제가 되어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강조한 대로 “모두가 모두를 지키는” 생명 존중 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 이번 전략이 실효성 있는 실행을 통해 성과를 입증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실패를 거울삼아 개선하고, 구조적 원인을 끝까지 파고들 때 비로소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 배*휘

1. 뉴스 제목

한국 자살률, OECD 1위 못 벗어났다

2. 링크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172036005#ENT>

3. 이에 대한 비평

한로로 작가의 『자몽살구클럽』을 읽으며,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잘 참는 능력’과 그로 인해 고통받는 아이들의 절망적인 현실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한국 사회가 조장하는 성과주의와 경쟁의 개념이 청소년들의 삶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그들을 향한 사회적 인식은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접하게 된 본 기사는 최근 4년 새 10대 자살이 34% 급증했으며, 이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면서도 정작 청소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도움은 막막하다는 실상을 담고 있다.

기사에 등장하는 청소년의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내 감정조차 내가 컨트롤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이걸 조절이 되는구나”라는 처절한 고백은, 삶의 통제권을 잃은 아이들이 결국 자해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표현하게 되는 비극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들의 고통은 단지 ‘사춘기의 일탈’이나 ‘개인의 나약함’이 아닌, 끝없는 성적 경쟁과 학교 폭력, 가정 내 단절 속에서 구조적으로 고립된 결과이다. 마치 『자몽살구클럽』의 네 사람이 느꼈던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절망이 이 시대 수많은 청소년들의 목소리임을 확인시켜준다.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당연한 존재로 기대하고 요구할수록, 정작 그 이면에 깔린 살인적인 압박감은 외면하는 이중적인 사회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처럼 심각한 절망 속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인권을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실질적인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명목상 존재하는 ‘자살 예방 정책’과 ‘위험군 관리 계획’이, 정작 그들을 내모는 과도한 경쟁 환경과 입시 중심의 구조를 방치한 채 겉으로 보여지는 ‘관리 결과’에만 집중하는 사회의 태도로 인해 쉽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느낄 수 있었다. 한 사람의 소중한 삶이 바쳐져야 비로소 심각성을 느끼고 뒤늦게 ‘사회적 재난’이라 이름 붙이는 이 현실이 과연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늘 그랬듯이 전국이 들쭉일만한 큰 사건이 발생해야 비로소 심각성을 느끼고 뒤늦게 수습하는 한국 사회의 특징이 이처럼 절망적인 현실을 보다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기사였다. ‘살고 싶다는 말은 혼자서 할 수 없다’는 책의 깨달음처럼, 아이들의 삶이 개인의 선택이나 노력 부족으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사회의 총체적인 실패로 인식되어야만 이 재난은 멈출 수 있을 것이다.

* 김*현

1. 뉴스 제목

[단독]자살, 주변에 치명적 영향… 전염의 고리 끊어야

2. 링크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60905/80132202/1>

3. 이에 대한 비평

해당 기사는 자살이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주변인과 우리 사회에도 분명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심리부검센터의 조사 결과와 정신건강 전문가의 논문을 토대로 개인의 자살이 가족관계는 물론, 직장 동료와 친구, 자살을 마주하는 소방관과 경찰관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를 알리며 개인의 책임과 선택으로 치부하며 간과했던 ‘나비효과’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주장했다.

위와 같은 보도는 작은 나비의 날갯짓으로 치부됐던 자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며, 계속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대안 제시 및 예방 방안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한 단발적 보도가 아닌 사회적 재난을 바라보는 심층적 보도로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활동 자료